

---

서울대-화동사범대학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首尔大学-华东师范大学第一届中韩和平合作论坛

#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 관계

## 统一半岛时代的中韩关系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9:50-18:00

日期: 2018年10月18日(周四) 9:5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

场所: 首尔大学教授会馆4会议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화동사범대학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 프로그램 ...

09:30-09:50	등록	
09:50-10:00	환영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통일평화연구원장)
10:00-11:00	<b>제1라운드: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b>	<b>사회:</b>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① 한중수교의 역사과정	선즈화(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② 한중수교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등지에(증공중앙당교)
	③ 한중문화 교류와 역사적 교훈	리 샤오지에(산둥공상학원)
	④ 18세기 청조 서적사 교류와 융합	자오 청지에(원난대학 역사 및 당안학원)
11:00-12:00	<b>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b>	
	⑤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긴장완화의 역사과정	량즈(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⑥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⑦ 냉전기 미국의 대한 경제/군사 원조의 특징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⑧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김성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2:00-12:10	휴식	
12:10-13:10	<b>라운드테이블 토론</b>	<b>좌장:</b>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3:10-14:30	점심식사	
14:30-15:15	<b>제3라운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의 전망</b>	<b>사회:</b>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⑨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이상숙(국립외교원)
	⑩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미·한 관계	류밍(상하이 사회과학원)
	⑪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5:15-16:15	<b>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역할</b>	
	⑫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신욱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⑬ G2의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손인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⑭ 동아시아 충돌 지점의 전이	이정훈(서울대 중어중문과)
	⑮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동양평화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6:15-16:30	휴식	
16:30-17:50	<b>라운드테이블 토론</b>	<b>좌장:</b> 선즈화(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17:50-18:00	폐회사	임경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首尔大学-华东师范大学 第一届中韩和平合作论坛

## … 会议日程 …

09:30-09:50	登记	
09:50-10:00	欢迎辞	郑根埴 (首尔大社会学系教授/前统一和平研究院院长)
10:00-11:00	<b>第一轮：中韩交流的历史意义与局限</b>	主持：白池云（首尔大统一和平研究院）
	① 中韩建交的历史过程	沈志华（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② 中韩建交中的中国外交决策再探讨	董洁（中共中央党校）
	③ 中韩文化互动与历史借鉴	李效杰（山东工商学院）
	④ 十八世纪中朝书籍史的互动与通融	赵成杰（云南大学历史与档案学院）
11:00-12:00	<b>第二轮：美韩同盟体系与中韩关系</b>	
	⑤ 1970年代上半期朝韩关系缓和的历史考察	梁志（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⑥ 冷战时期美国在韩核部署与朝半岛安全	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⑦ 冷战时期美国的对韩经济军事援助政策的特征	朴泰均（首尔大学国际大学院）
	⑧ 作为等级制度的美日韩安保三角关系	金圣哲（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2:00-12:10	茶歇	
12:10-13:10	圆桌讨论	组长：金炳鲁（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3:10-14:30	午餐	
14:30-15:15	<b>第三轮：首脑峰会之后朝鲜变化的展望</b>	主持：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⑨ 金正恩时代朝鲜党军关系的变化与先军政治	李相淑（国立外交院）
	⑩ 朝鲜即将步入无核化进程中的中国立场与中美韩关系	刘鸣（上海社会科学院）
	⑪ 半岛统一的理想模式是否存在	金炳鲁（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5:15-16:15	<b>第四轮：变化中的东亚地缘政治与半岛的角色</b>	
	⑫ 中国的崛起与旧金山体系的转变	申旭熙（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⑬ G2神话与东亚地区的治理	孙仁柱（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⑭ 东亚爆发点的转移	李政勋（首尔大学中文系）
	⑮ 东北亚经济圈的崛起与东方和平	白池云（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6:15-16:30	茶歇	
16:30-17:50	圆桌讨论	组长：沈志华（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17:50-18:00	闭幕辞	林灵勋（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院长）

# 목 차

## ◆ 제1라운드: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① 한중수교의 역사과정 ..... 선즈화(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 3
- ② 한중수교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 등지에(중공중앙당교) / 5
- ③ 한중문화 교류와 역사적 교훈리 ..... 샤오지에(산둥공상학원) / 7
- ④ 18세기 청조 서적사 교류와 융합 ..... 자오 청지에(원난대학 역사 및 당안학원) / 11

## ◆ 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

- ⑤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긴장완화의 역사과정 랑즈(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 17
- ⑥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 21
- ⑦ 냉전기 미국의 대한 경제/군사 원조의 특징 .....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 25
- ⑧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 김성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27

## ◆ 제3라운드 : 정상회담 이후 북한변화의 전망

- ⑨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 이상숙(국립외교원) / 33
- ⑩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미·한 관계  
..... 류밍(상하이 사회과학원) / 37
- ⑪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43

## ◆ 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역할

- ⑫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 신욱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49
- ⑬ G2의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 손인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53
- ⑭ 동아시아 충돌 지점의 전이 ..... 이정훈(서울대 중어중문과) / 55
- ⑮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동양평화 .....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57

## ◆ 한중평화협력포럼 참석자 프로필

# 目 次

## ◆ 第一轮：中韩交流的历史意义与局限

- ① 中韩建交的历史过程 .....沈志华（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67
- ② 中韩建交中的中国外交决策再探讨 .....董洁（中共中央党校）/ 69
- ③ 中韩文化互动与历史借鉴 .....李效杰（山东工商学院）/ 71
- ④ 十八世纪中朝书籍史的互动与通融 .....赵成杰（云南大学历史与档案学院）/ 73

## ◆ 第二轮：美韩同盟体系与中韩关系

- ⑤ 1970年代上半期朝韩关系缓和的历史考察  
.....梁志（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85
- ⑥ 冷战时期美国在韩核部署与朝半岛安全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87
- ⑦ 冷战时期美国的对韩经济、军事援助政策的特征  
.....朴泰均（首尔大学国际大学院）/ 91
- ⑧ 作为等级制度的美日韩安保三角关系 .....金圣哲（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93

## ◆ 第三轮：首脑峰会之后朝鲜变化的展望

- ⑨ 金正恩时代朝鲜党军关系的变化与先军政治 .....李相淑（国立外交院）/ 99
- ⑩ 朝鲜即将步入无核化进程中的中国立场与中美韩关系  
.....刘鸣（上海社会科学院）/ 101
- ⑪ 半岛统一的理想模式是否存在 .....金炳鲁（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05

## ◆ 第四轮：变化中的东亚地缘政治与半岛的角色

- ⑫ 中国的崛起与旧金山体系的转变 .....申旭熙（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109
- ⑬ G2神话与东亚地区的治理 .....孙仁柱（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111
- ⑭ 东亚爆发点的转移 .....李政勋（首尔大学中文系）/ 113
- ⑮ 东北亚经济圈的崛起与东方和平 .....白池云（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115

## ◆ 中韩和平合作论坛 人物简介



## 제1라운드: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사회: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중수교의 역사과정

선즈화(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한중수교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둥지에(중공중앙당교)

한중문화 교류와 역사적 교훈

리 샤오지에(산둥공상학원)

18세기 청조 서적사 교류와 융합

자오 청지에(원난대학 역사 및 당안학원)





# 신형 중한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선 즈 화

(화동사범대학교)

## 1. 역사적 회고

- 1) 중한수교의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서술: 민간부터 정부 차원까지
- 2) 왜 1990년부터 중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덩샤오핑의 생각
- 3) 10여 년 이래 중한관계의 발전이 양국에게 미친 영향: 경제와 외교
- 4) 고구려 문제와 사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극단적 민족주의의 업보

## 2. 현실적 필요

- 1) 지금 한반도의 정세: 중미북 삼각관계의 변화 및 결과
- 2)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 상승: 대미관계-쌍방의 곤경(딜레마)
- 3) 북한 개혁개방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중한 정책 소통과 공조의 필요성
- 4)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대에서 협력에 이르는 중한의 입장
- 5) 중한관계 발전의 모멘텀과 걸림돌: 경제, 외교, 안보, 이데올로기

## 3. 학자로서의 책임

- 1) 중국의 주변환경: 상상 속의 우호관계와 실감의 괴리
- 2) 우호적 관계 수립의 전제는 이해이고 상호이해의 전제는 소통: 세 개의 채널
- 3) 학자 간의 소통과 교류는 상호이해의 장이 되어야



## 한중 수교 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등 지 에

(중공중앙당교)

냉전시기, 동북아지역에서 두 개의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소련,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삼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삼각’이었다. 1970년대, 중국은 차례로 미국과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한 데 이어 국교수립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중한관계의 정상화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발표는 중국 외교의 정책결정이라는 시각에서 중한수교가 더뎠던 원인, 그리고 중국이 수교를 단행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중부터 198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는 중한 양국관계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단계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국이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관계를 추진해 나갔다. 이 시기의 중한관계는 양자무역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제, 문화 등 영역에서 끊임없는 교류의 확대가 있었으나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한반도 안정유지의 전략적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보다 결정적 동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양국의 수교는 실질적 단계로 돌입하지 않았다.

1989년 봄부터 1991년 말에 이르는 시기는 국제정세의 격변기이면서 중국 국내정치 상황이 특수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변화무쌍한 격변기 속에서 중한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탄력이 붙었다. 중국외교의 정책결정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의 수요와 다른 객관적인 요소들이 그 동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서방국가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국내외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야 했다. 한반도에서의 “교차승인”을 둘러싼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자신에게 가해지는 미국과 일본의 제재를 풀어주는 교환조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둘째, 동유럽 국가들의 격변이 미친 파장을

들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됨에 따라 소련과 기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이는 중국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중국 “소련카드”를 함부로 못 쓰게 만들었다. 셋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이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다. 넷째, 중한무역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결과, 1985년에 최초로 대북 교역액을 초월했다. 한국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성(省)의 경우, 양국 간 공식적 관계의 부재로 인해 무역관계의 진일보적 발전이 심하게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중국의 국내 개혁이 정체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중국 개혁개방에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데 새 “엔진”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중한수교는 중국외교의 중요한 전략적인 수였고 이의 최종적인 달성은 중·북관계의 처리, 한·대만 관계, 한미일 동맹을 보는 중국의 시각, 남북관계의 전망 그리고 중한관계의 자리매김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었다.

## 한중 문화교류와 역사적 교훈

리 상 오 제

(산둥공상학원)

한반도 정세의 완화에 따라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이 교육, 체육, 미디어 및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를 해 왔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즉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는 양국관계 발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눈 여겨 볼만한 것은 한중 문화교류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상적인 교류가 여전히 많은 데 비해 심도 있는 교류가 아직 부족한 편이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학술 분야에서도 언뜻 보면 활발한 듯하지만 실질적 상호학습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양국과 모두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를 제외하고는, 양측이 상대방의 연구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 게다가 양국이 상호교류에 얼마나 능동적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 한중 양국이 모두 상대방을 주요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을 듯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많은데, 대체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정치제도의 상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한중 간 문화교류의 보다 심층적 발전을 발목 잡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화목한 이웃이었고 양자 간의 문화교류가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양국의 교류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오늘날의 난제를 풀어주는 역사적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9 세기, 당·신라 관계는 요동(遼東)정벌을 둘러싼 협력을 시작으로,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의 충돌 시기, 통일신라기에 접어든 후의 평화공존 시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조공관계에 이르렀다. 이와 맞물려, 당·신라가 경제문화적으로 교류를 확대한 결과 당이 신라에 대한 인식도 최초의 “호사산신(好祠山神)”에서 “인의지향(仁義之鄉)”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된 후, 당은 신라, 일본과 동아시아 해역에서 지속적인 경제문화적 교류를 가졌다. 일본에 비해, 당은 신라와 더 빈번하게 교류했고 양자관계도 더욱 긴밀했다. 통계적으로, 일본이 총 13 차례의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였고 평균적으로 20 여 년에 한 번의 빈도였다. 이에 비해, 신라는 7 세기만 해도 50 여 차례의 방문 빈도를 보였다(불완전한 통계). 당은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잦은 왕래를 통해 신라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였고 양자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당과 신라의 문화교류에 대한 고찰은 보다 큰 범주에서, 긴 역사적 안목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신라, 고려 및 조선시대를 가리키던 별칭인 “동국”을 예로 들자. 고대중국의 맥락에서, 선진(先秦)시기의 “동국”과 “서국”이 각각 중국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제후국을 가리키는 말로, “천하관”에 내포된 개념들이다. 실크로드의 개척에 힘입어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각국과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 “서국”이 서역 내지 그 너머의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 기존 “천하관”의 경계를 넘어섰다. “동국”이 가리키는 범주도 중국 동쪽의 제후국에서 전체 중국을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다.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함께 유학, 한자, 불교, 율령 등 당 문물이 문화교류를 통해 신라와 일본에 전파되었다. “동국”이란 표현도 당 중후반에 들어서는 신라 및 고려의 별칭 내지 자칭이 되었다.

“동국”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천은 보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이 교류를 통해 신라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라와 고려를 동국으로 칭하는 것이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동부 민족과 국가가 형성하는 지리적, 종족적 요소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인지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가 스스로를 “동국”으로 칭하는 것이 이 인지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흡수했던 셈이다. 이는 당과 신라의 문화교류가 애초부터 다방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당이 가진 신라에 대한 인식이 조정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당·신라 관계발전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양자 간의 문화교류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신라 간의 문화교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관변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민간 차원의 왕래가 부차적인 위치에 있었다. 상대방 문화에 대한 수용 면에서도 신라가 당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이 더 많았다. 교류의 지리적 범주도 교통노선의 주변지역과 양국 정치의 중심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신라가 당을 주요 교류대상으로 삼았던 데 반해 당이 그러지 않았다.

양국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상호인식에 달려 있다. 올바른 상호인식을 키우는 관건은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연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역사를 거울로 삼아 교훈을 얻는 것이다. 과거 당과 신라가 긴 세월을 걸쳐 광범위하게 교류해 왔던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한중 양국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교류는 상호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양국관계의 발전을 이끌게 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한중 문화교류의 핵심은 교류의 경계를 넓혀가고 수준을 심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다양한 왕래를 통해 양국 간의 전면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면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진일보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 오늘날 중국에 대한 한국 주류사회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는 어느 정도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 청 중기 한중서적사의 상호교류와 융합

자오칭지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청나라 건륭가경 시대에는 사회발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순치 강희 융정 통치를 거쳐 청왕조의 통치는 전반적으로 공고해졌다. 이 시기 한중 양국 사절단의 빈번한 왕래는 양국 문인에게 상호 접촉하고 사상문화를 교류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의 ‘북학파’ 문인학자인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은 사절단의 수행원 또는 검서관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문인과 사상문화 교류를 수행했다. 홍대용(1731-1783)이 청나라 문인과 왕래한 서신 130 편이 남아있으며, 주로 3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대에게 근황을 전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 둘째, 상대에게 책을 구해달라 하고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 셋째, 학술적 토론을 전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 18 세기 한중 문인의 왕래는 한중교류의 심화를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홍대용과 청대 학자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중 문인의 서적의 전파 및 서신왕래를 통해 한중 양국 서적의 이동과 학술교류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대용의 자는 덕보이며, 호는 홍지 혹은 담헌이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로서 북학파의 선구자이다. 어린 시절 그는 조선유학의 거두 김삼연의 손자 김원행의 가르침을 받아 천문, 율력, 산수 등 실용학문의 연구에 힘썼다. 홍대용은 “북학”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여 청의 학자 엄성, 반정균, 주문조 등과 자주 왕래했다. <담헌집>은 홍대용이 중국 방문 기간 청대 학자들과의 서신왕래를 기록한 책이다. 그는 건륭 30년(1765) 11월 2일 “동지겸사은사사행단(冬至兼謝恩使使行團)”을 따라 한양을 떠났으며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한 3명의 사신은 정사 순의군 이훤, 부사 참판 김선행, 서장관 홍억 등이었다. 건륭 31년(1766) 1월에 이들 일행은 북경에 도착했다. 도착 한 뒤, 과거를 치르러 북경에 온 엄성, 반정균, 룽비 등 3명의 향저우 선비를 만났다. 그들은 북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많은 시문 교류를 했다.

중한 문인들은 자주 필담으로 교류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교류에 참여한 것은 조정의 문인, 진사, 거인이 대다수이다. 그 가운데에는 저명한 학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부상서 팽원서, 군기대신 왕걸, 옹방강, 호부낭중 완복, 형부주정 양희 등이 있다. 필담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며, 예법풍속, 과거시문, 도서편찬 등과 관련있다. 청 중기 필담 내용은 주로 문학, 학술, 풍속고찰 위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홍대용의 <담헌연기> <건정필담>이다. 홍대용의 서신, 문집은 청 중기 조선 학자와 중국 학자의 왕래 관계를 입증한다. 청대 학자 주문조가 편집한 <일하제금집>은 중국 문인과 조선 문인의 서신 왕래를 기록하고 있다.

홍대용과 청대문인의 왕래는 한편으로 양국의 문화, 학술 교류를 촉진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서신을 통해서 그는 조선이 많은 학술 연구의 요체와 자신의 연구성과를 청나라 벗들에게 소개했다. 이것은 그 이전 한중 문인 교류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홍대용의 공은 빠질 수 없이 큰 것이다. 예컨대 그가 북경에 거주하는 동안 <동국기략>을 저술하고, 이 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귀국 이후 엄성 등의 문인에게 <성학집요> 같은 조선의 서적을

보내기도 했다. 다른 한편, 서신과 서적의 왕래를 통해서 양국 문인은 학술 문제를 더욱 깊게 토론했다. 예를 들어 홍대용과 등원현은 <여등원헌서>에서 목판과 토판 인쇄의 차이점을 토론한 적이 있다.

홍대용과 중국학자의 교류를 통해서 18 세기 중반 한중 학술의 발전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중학자들은 서적, 서진, 필담의 방식을 통해서 상호 문화와 학술전통을 이해하고 학문을 토론 연구하는 동시에, 양국 학자들의 우정도 증진하였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 학술교류권으로서 한문서적이 대량으로 필사되어 동아시아 각국에 유통되었다. 학자 간 저작의 상호 교감 또는 제자 등은 유통되는 문본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필사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아시아 책의 역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 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

사회: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긴장완화의 역사과정

량즈(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냉전기 미국의 대한 경제/군사 원조의 특징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김성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 완화의 배경, 과정 및 영향

량 즈

(화동사범대학교)

1970년대 초, 북한과 남한이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 의미가 있는 장시간 대화를 가졌다. 이번 대화는 동서진영 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내부의 화해를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언하면, 외부 강대국들의 탈 이데올로기가 남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한반도 내부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미소간의 대결이 불러일으킨 남북간 체제경쟁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짚어본다면 탈냉전기 ‘냉전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안과 밖의 역학구조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의 남북관계 개선의 큰 시대적 배경은 동서진영 간의 긴장완화, 한반도 정세의 지속적인 긴장, 그리고 남북한 국력 차이의 해소 등이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은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12일, 한국 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사에게 10월 말까지 이산가족 찾기를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북한 적십자사가 즉각 응답하여 회담을 9월에 앞당기는 것을 제안한 동시에 이산가족의 우편교환, 자유왕래 및 상호방문 등 사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15일, 박정희는 한국 적십자사의 건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 번도 대화 테이블에서 마주앉은 적이 없었던 남과 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사가 각각 요원을 파견하여 초보적인 접촉을 가졌으며, 그 주요 목적은 예비회담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9월20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그 주안점은 본회담의 의제를 정하는 것이었다. 11월 20일, 제9차 예비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북측

---

<sup>1</sup> 그 동안 양측의 대화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외에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양측 체육계 관리가 스위스에서 가진 회담에 국한되어 있었다.

대표가 적십자 회담과 별도로 양측 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비밀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남측이 긍정적으로 회답했다. 1972년 3월 7일, 남측의 정홍진과 북측의 김덕현은 비로소 마주앉게 되어 고위급 비밀회담의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5월2일~5일, 이후락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다. 5월29일~6월1일, 북한 제2부상 박성철도 서울을 비밀리에 찾았다. 7월4일 오전 10시, 남북한이 동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김일성이 제기한 ‘통일3원칙’을 긍정하였으며, 평양-서울 간 직통전화 가설 및 남북화해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만 놓고 본다면 1년 동안 남북 간 대화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대한 양측의 평가, 특히 한국측의 평가를 들여다보면 성명 액면에 나와 있는 양측의 약속과 실제 정책적 구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의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8월30일부터 남북한 적십자사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본회담에 돌입하였으나 회담이 머지않아 양측의 뚜렷한 의견차로 인해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은 점진적인 통일에 방점을 두며 회담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북한측은 회담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궁극적인 인도주의의 실현은 조국통일이라고 주장하였고 남측이 이산가족 찾기를 위해 결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호소하였다. 1973년 7월 11일 제7차 본회담까지, 양측이 회담의 첫 번째 의제인 이산가족의 주소 조사 및 생사확인을 놓고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그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도 수 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973년 6월부터, 남북한이 줄 다리듯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8월 8일, 한국신민당 지도자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배후로 한국 중앙정보부가 지목되었다. 28일, 북한의 김영주가 성명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후락을 제명하는 동시에 남북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의 인민대표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불응 시 대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익일, 이후락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한국 중앙정보부가 연루되었다는 설을 부인했으며 북한 측에게 성명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 양측은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 회의를 단속적으로 개최했으나 회담의 급이 확연히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회담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서로를 공격하는 채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는 남북대화가 정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군사충돌이 남북 간의 특수적 공존상태가 되었으며, 그 단적인 예로는 1973년 10월 후의 서해5도 충돌과 1976년 8월18일의 판문점위기를 들 수 있다.

그럼 양측이 모두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의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대화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되지 못했을까? 우선, 양측이 각각 설정한 대화의 목표가



서로 엇갈렸다. 북한은 대화 과정에서 한결같이 정치와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외세개입이 없는 자주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력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미사일과 핵개발에 비밀리에 착수했다. 둘째, 양측 모두 국내요인의 제한을 받는다. 비록 김일성이 북한 내에서 최고 권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본인이 원하는 모든 정책을 관철시키기에 한계가 없지는 않았다. 남북대화 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대입장으로부터 김일성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또한,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측대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남측 언론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게는 적신호에 틀림없었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한편으로 “주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72년 11월에 선포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의 이름에 이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통제를 강화하여 ‘공산당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남북대화의 보조를 늦추기도 했다. 셋째, 대외관계에 있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또한 최대화하려고 했다. 상대방과의 긴장완화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한국도 중국과 소련과 관계를 맺는 것을 추진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이 모두 자신의 동맹국이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려고 했다.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대화는 비록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이 되지는 못했으나 양측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 한국 국내정치의 형태를 은연중에 형성시켰다. 국가안보를 목표로 한 남북대화가 한때 오히려 정권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었던 것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독재를 강화하게끔 했던 주된 동인이 되기도 했다. 둘째,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 미국의 한반도 핵배치와 한반도 안보

천 보

(화동사범대학교)

2017년, 사드배치 문제가 대두되어 한반도와 서태평양지역의 중요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 핵무기 재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입을 모아 한국에서 전술핵의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도입”이 가뜩이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핵위기를 더욱더 미로에 빠뜨리는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증대시켜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도입”이란 미국이 과거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핵위기의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는 속에서 이 “과거사”에 대한 궁금증마저 생긴다. 이는 지금 한반도의 이 난국에 영향을 미쳤을까?

기존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시간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장장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한 핵배치의 수는 1967년에 정점에 이르러 8개의 유형에 총 950기에 달하였다. 냉전시기, 미국의 핵은 주로 캠프 에임스, 군산 공군기지와 울산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1980년대 들어, 배치수가 점차 줄어들어 200~300기의 수준을 유지했다가 냉전 종결의 1990년에 이르러서는 100기 정도로 줄었다. 핵무기 완전 철수 후, 미국은 주로 전략공군,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 등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왔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의 한반도 핵배치의 역사는 냉전시기 미국 고위층의 핵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핵 관련 정책결정은 위기 시 핵무기의 사용 여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핵무기의 배치를 포함한 일련의 결정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핵무기가 억지수단으로서 그의 배치를 둘러싼 정책결정에 있어 군사와 정치라는 두 방면의 쟁점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워싱턴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금기”가 된 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배치도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위기 속에서의 핵 관련

정책결정처럼 미국이 해외 핵무기 배치 시 억지와 금기의 이중성이 항상 수반된다. 워싱턴은 한편으로 핵배치를 통해 핵 억지력의 발휘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정 시 고위층 내부의 갈등이나 서방 동맹국의 반대 및 이탈행위를 경계해야 하기도 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핵배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핵배치를 결정하기 앞서, 이승만 정부가 핵무기를 악용하여 북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델레스의 고민이었다. 결국 결정하는 과정에서 워싱턴이 한국군 감축에 대한 강한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교환조건으로 군축에 대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냈다. 핵배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의 군 동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통제도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는 중·소와의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공고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냉전시기 미국의 한반도 핵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는 1999년 미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된 일부분의 문서밖에 없다. 1958년 1월 당시, 미국이 4~5 종류의 핵장비와 150개의 핵탄두를 배치했다. 같은 해 3월, 핵폭탄과 폭격기도 추가로 한국에 들여왔다. 1961년 1월에는 미 군부는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들 무기 중, 8인치 구경의 화포가 미군 핵배치의 33년 내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최장수로 꼽힌다.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들의 사정거리로 봤을 때 그 억지력은 지역적인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무기의 최대 사정거리는 1000km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구소련의 블라디보스톡 등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였다. 육지에서 배치한 핵무기 외에도, 미군의 전략핵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1980년대 미 해군의 전략 미사일 핵잠수함이 간혹 한국의 군항에 정박하기도 했는데, 1979년~1980년 2년 동안 10여 차례가 있었다. 핵잠수함에 보통 미사일 16발에 핵탄두 48개를 탑재한다. 문서가 아직 기밀 해제되지가 않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정박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미국의 비전략 핵전력의 감축과 다소 관련이 있어 보이고 또한 한국 당시의 정치변동과도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미국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하던 핵무기는 1991년에 철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철수의 과정은 1998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초 핵무기 철수에 관한 결정은 1991년 조지·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군축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술핵을 6개의 나토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결정은 곧바로 집행되지

않았다. 추후 태평양사령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최종적인 완전한 철수는 1998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해당 문서는 1991년 11월 5일 부시 대통령이 제64호 대통령 지시(NSD-64)를 통해 1991~1992 재정연도의 핵배치 승인(Nuclear Weapons Deployment Authorization, NWDA)을 통과시켜 해외 배치 중인 지상 및 해상 전술핵을 점차 본토로 철수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0~22일에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의 연석회의에서 한국 핵배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60개의 핵폭탄이 일차적으로 철수된 데 이어 B61 핵폭탄도 철수되었다. 1998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에서 핵무기의 부재를 선언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미 전해 들은 바가 있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완전 철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관계사의 회고와 전망

박 태 군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미관계의 주요 측면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미군정의 설치, 한국전쟁의 발발, 한미상호조약(1953)과 한미합의의사록(1954), 그리고 그 이후 정전체제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 등으로 통해서 잘 드러났다.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된 미국의 군사원조와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FMS는 한미관계에서 군사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관계에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한국의 OECD와 WTO 가입을 통해서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미관계가 군사안보적 분야 못지 않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상 한미 간의 군사안보관계는 그 시작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1945년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정이 설치되었지만, 1947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에는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함께 환율문제가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일본에게 넘기려고 했고, 이를 통해 한일국교 정상화(1965)가 이루어졌다. 한국에 대한 경제개발원조가 케네디 행정부부터 시작된 것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듦으로써 한국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닉슨 행정부는 닉슨 독트린 직후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고려하였다. 만약 워터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한 미 지상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1970년대 초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포드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카터 행정부에서 다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정책이 입안되었고, 이를 위해 닉슨과 카터 행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 남한과 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교차승인 등을 추진했다. 카터 행정부는 3자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적인 축의 하나로 무역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며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가자 닉슨 행정부에서는 면직물 쿼터제도를 통해 한국의 수출을 통제하려고 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의 전자제품 육성정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중반에 한미 간의 주요 이슈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1990년 이후에는 GPR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필요했다는 안보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의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책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흥미로운 점은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인 아이젠하워, 닉슨,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화당의 정부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가 군사 안보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케인즈적인 재정정책을 세웠던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카터 행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안으로 연결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볼 때 닉슨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으로 데자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이 한미관계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재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때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김 성 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하셨다. 이 발표가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미-일-한이라는 위계 속에서 살펴볼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종식하고 1951년 9월 일본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맺고 곧바로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한국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두 개의 중요한 동맹관계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탄생되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60년대 전반 한일회담에 적극 개입, 중재함으로써 미-일-한 안보삼각관계를 제도화하였다. 물론 한일회담이 안보협정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비용분담 문제(아래 설명), 즉 일본의 한국 원조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안보삼각관계는 두 개의 동맹(미일 및 한미)과 한 개의 파트너십(한일)으로 조합된 하이브리드 관계로서, 내부에는 특히 파트너관계에서 분쟁과 불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동맹에 관한 분석은 동맹 형성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설명과 동맹 유지의 내부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맹 연구는 세력 균형 또는 위협의 균형에 의해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동맹내부정치 intra-alliance politics 특히 긴장, 균열, 힘의 분할에 관한 나토, 바르샤바조약기구 사례 분석 등이 있다. 즉 동맹내부정치 연구는 공동의 외부적 위협이나 위협인식이 있다고 해서 동맹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에서도 외부적 위협 이외에도 동맹내부정치가 생각보다 중요했다.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데서 각국의 국익 및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맹내부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용분담 burden sharing과 공약 commitment 문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의 안보를 위해 누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며 누가 얼마나 부담을 질 것인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미-일-한 안보삼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용분담과 공약은 동맹(여기서는 미-일-한관계)을 결속시키는 요소이며, 이 둘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맹은 안보에 관한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데, 공약에는 비용분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비용분담을 기꺼이 하지 않으려 하는 점이 문제이다. 비용분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의 공약 또는 어느 강대국의 공약이 전 멤버들의 안보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비용분담이란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공동의 안보를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서, 약소국 멤버에게 경제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국의 군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예산을 지출하거나, 외부 위협에 직접 대처하는 특별한 안보행위에 따른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미-일-한 삼각관계는 위계적이어서, 비용분담과 공약을 둘러싸고 삼자관계가 비대칭적, 불평등한 관계였다. 이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기 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에 대한 우려도 서로 달랐다. 미국은 한국관련 무력갈등에의 연루를 우려하고 일본은 한일간 안보 연관성에 대한 공약 자체를 회피한 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방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원조 측면에서의 방기를 우려하였다.

미국은 최상위 파워로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두 개의 동맹을 이끌면서 안보삼각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하였다. 미국은 조약 및 공동선언문 등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하였고, 주한미군과 후방기지로서의 주일미군의 전력을 통해 소련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공산권에 접근하는 정책, 행위들과 관련해 일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제하였다.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개입해 조정, 해결하려 하였다. 일-한 사이의 분쟁, 불화가 안보삼각관계에 손실이자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일-한 안보삼각관계 보다는 훨씬 큰 범주에서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다. 전후 일본은 미국이 “적에서 동맹으로” 전환해 활용할 만큼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패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 기술, 경제 잠재력 등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전쟁기간동안 일본은 병참기지로서 경제회생 기회를 맞았

으며 1964년 동경올림픽이 상징하듯 60년대에는 경제번영의 시대를 맞았다. 일본은 미국의 대소련봉쇄전략에 따라 전 세계 전략지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미국에 의해 프레임된 US-framed 원조라고 말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일본의 한국 원조 규모는 상승하고 미국의 원조 규모는 감소하였다.

안보삼각관계 안에서 경비분담과 공약은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대한국 원조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안보가 한국, 동아시아의 안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일본이 동의(주로 미일 공동성명에서)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이런 점을 언급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경비분담에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원조가 경제에 국한한다는 논리를 견지하여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려 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여 원조대상인 저발전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반대로 한국은 소련봉쇄 안보전략의 최전선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당연한 비용지불의 의무, 즉 원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한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국가간 발생하는 이익의 차이보다 훨씬 더 논쟁적이었다. 이를 역사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전략원조에서 미국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문제를 다루는데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다. 또한 한일관계에서 일본은 미국의 접근법과 일치하여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북송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시 미일은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입장을 배제하고 북송을 지지한 사례, 그리고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마네현의 1905년 관보계재를 법적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입장을 미 러스크 국무장관이 옹호한 사례 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이유 자체보다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사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50년대 한일회담 초기에는 한국이 일제의 지배를 비판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일본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보상이란 없으며 경제협력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원조를 “경제협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무임승차자라는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원조를 안보 또는 방위와 연관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미-일-한 안보삼각관계는 진화해 왔다. 냉전 종식이 삼각관계 변화의 구조적인 요인이었던 반면 삼각관계 내부에서의 변화도 중요했다. 미국과 일본에게는 안보위협이

요소가 소련에서 부상하는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 내부의 정치변동, 특히 보수 견제세력인 사회당의 몰락 및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강화와 함께 미일 군사일체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으며 1996년에는 OECD회원국이 되어 피원조국의 지위를 탈피하고 원조제공국이 되었다. 경비분담 구조의 결정적 변화로 인해 한일관계의 비대칭성, 위계는 약화되었다. 미국은 안보삼각관계를 삼각동맹관계로 전환하려 시도했으나 이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냉전 후 한일간 역사갈등은 비대칭성 완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역사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삼각관계 속에서 최상위 파워로서의 역할, 즉 개입과 중재를 시도하였는바,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문제 합의가 그 결과였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최고조 상태에 이르렀던 안보삼각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과정이 진전된다면 두 개의 개별 동맹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제3라운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의 전망

사회: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이상숙(국립외교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미·한 관계

류밍(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이 상 숙

(국립외교원, KNDA)

## 1. 서론

- 2018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 2018년 4월 북한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 선포
- 병진노선에서 경제보다는 핵무력 건설에 집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은 선군정치가 지배함.
- 그러나 핵무력 건설에 대해 ‘국가핵무장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자원 배분이 집중된다면 북한의 선군정치는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선군정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국가기구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 글은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를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2. 중국의 당군관계 이론

- 힐스프링(Dale Herspring)은 당·군 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군이 당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를 통해 당과 군의 갈등을 설명함. 즉 군이 수용의 폭을 확대할수록, 당의 군부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축소됨.
- 엘리스 요페(Ellis Joffe)는 중국의 당·군 관계를 당의 통제(party control), 공생(symbiosis), 직업주의(professionalism)로 구분하여 세 가지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함.

### 3. 김정일 시대의 당군관계

○ 북한 문헌에 따르면 선군정치의 실현은 “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 정치체제”를 통해서임.

○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실현됨.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령도자로서 국방위원회 사업은 물론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할 뿐 아니라 국방위원들을 비롯한 중요 군사간부들을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며,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는 물론 비상사태 선포 권한까지 장악하는 위상으로 격상됨.

○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군 관계는 요폐의 당.군 관계 중에서 ‘공생’ 관계였다고 분석됨.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 북한을 통치함.

### 4.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 김정은 제1비서는 당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당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함. 제7차 당대회 이후 군의 당내 위상 하락은 구체화되었다. 이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위원에만 선출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총참모장도 위원으로 하락함.

○ 당의 정상화는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과는 조화되지 않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 시스템이 그것으로 2016년 6월 29일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회가 설립됨.

○ 국방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이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주요정책을 세우는 데에 비해, 국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 중요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한다고 명시함.

○ 국무위원회에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여 선군정치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회가 선군정치를 구현한 국방위원회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함.



○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가장 비대해진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킴. 이 과정에서 당과 군의 관계는 요폐에 주장에 의하면 ‘공생’ 관계가 아니라 ‘당의 통제’라는 당.군 관계로 변화했다고 분석됨.

## 5. 결론

○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 의 약화는 경제부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8년 4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포하면서 경제건설에 군을 제외하고 “당과 국가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명시되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군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서도 군이 핵심 세력이었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 건설에서 군의 역할이 축소됨.

○ 국무위원회 조직의 출범은 이전 국방위원회의 군 중심에서 벗어나 당군정의 조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시대 당과 군의 관계는 요폐에 주장에 의하면 ‘공생’ 관계가 아니라 ‘당의 통제’라는 당.군 관계로 변화함.

○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관계 개선과 새로운 전략 노선 선포는 국무위원회 시스템 내에서 변화한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의 하락의 결과임.



#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발선에 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미관계

류 밍(刘鸣)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上海社会科学院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

최근 몇 년간 한반도 긴장 사태가 고조되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와중에도 중국은 시종일관 자기만의 원칙을 고수했다. 즉 시비곡직의 태도에 의하여 대북정책을 확정했던 것이다.

우선, 중국은 북한이 시대의 흐름, 국제사회의 문명과 규범의 요구를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것에 강경히 반대한다. 둘째, 6 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협상, 제재 결의 형성과정에서 미국,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유엔 제재 결의의 이행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엄격히 집행한다. 넷째, 중국이 누차 강조하듯이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가야 한다. 다섯째, 북미 사이의 불신과 상호 양보하지 않음에 대해서 중국은 실제적이고 균형잡힌 입장을 기반으로 하며 “쌍중단(双暂停)”, “평화체제(停和机制)” 전환을 통해서 북미 간의 대치 중지를 이끌어내어 협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한다.

중국은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남북한 양측의 대화, 화해, 협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두차례 회담에서 협의된 남북한 지도자의 컨센서스를 현실에 반영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호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려 한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 사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긍정적인 촉진 역할을 하기 바란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아직까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지 못한 현 시기 남북한이 군사적인 상호 신뢰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예컨대 비무장지대 최전방

약 10 개 감시초소 철수 시도 구상- 에 대해 중국은 환영하며 지지를 표한다. 중국은 북미 양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를 점차 구체화하고 단계별(分阶段), 동시 행동(同步走), 일괄적(一揽子)인 원칙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모든 관계자는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비핵화 3 가지 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비교적 막연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로 구체화해야 한다. 핵심은 북미 간에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단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단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즉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이다. 과거 단계별 비핵화의 책략은 늘 실패로 귀결되었다. 6 자회담의 경험을 통해 보면, 북미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흥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의제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추가했다. 이 때문에 단계별 원칙과 일괄적 원칙은 반드시 동시 작동해야 한다. 동시 행동은 한 쪽에서 행동을 취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경제제재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괄적 원칙은 일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 노선, 시간표가 필요하다. 계획없이 나아가고 협상과 수행의 시간을 지연하면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포함되어야 할 협상 내용과 협상 핵심 목표를 배제하면 안된다.

북미협상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더러,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안전상의 걱정도 없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신뢰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북미 간의 상호 신뢰가 북한의 비핵화와는 인과관계이며, 북미 간 쌍방향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 해야 한다.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미국이 모든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의 전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단계별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선의와 격려를 북한이 느끼도록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극단적인 압력행사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의 김정은과의 달콤한 대화만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비핵화의 조건과 범위,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중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비록 한국과는 교섭을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외교의제로 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외교 의제 순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 북한에 가하던 전략적 압박은 크게 완화되었으니, 이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발전이 없으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일방통행적 외교를 바꾸지 않고, 유연한 협상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대해 트러블을 만든다면, 한반도가 다시 교착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현재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은 더 많은 협력을 시도하고, 각자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남북한의 관계개선만을 돌파구로 삼으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있어 원칙은 고수하지 않고 유연성만 추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남북한 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발전을 유도하여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노선을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 73주년 기념 겸 한국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의 개선의 부수적 결과가 아닙니다. 반대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김대중 햇볕정책 노선은 분명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북미 간의 비협조 상황을 더 많이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는 8월 19일 개성연락사무소 설립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규정에 의하면 48시간 이전 유엔군에 월경계획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 관료가 군사분계선을 건너 북한 영토 내 경의선 구간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을 반대했다. 북한 역시 남북한의 서로 다른 입장을 알아챘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며,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미는 동북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서, 비핵화 추진 방식, 책임과 경제적 부담, 감독관리에 있어서 서로 협상해야 한다. 1년 이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존 볼튼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볼튼의 주장대로 되려면, 한편으로 북한의 완전한 협조가 필요하며, 북한의 완전한 협조가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동시행동이 필수적이고, 북한 내부의 완전한 결속도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 볼튼의 주장은 기술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안전하게 고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물질을 해체하는 것은 1년으로는 불가능하다.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과 북미 간 신뢰구축 사이에는 큰 갭이 놓여 있다. 중국은 비핵화의 협상국으로서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남북미 삼자가 공평하고 유효한 단계별 방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련국가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갈 것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남북한 평화와 공존을 바깥에서 지지하는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당연히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은 북미, 남북 각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중미남북이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중미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 정치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6자도 역시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이 상호보완하는 구조를 형성해나가, 지역을 탈냉전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중, 북중, 남북은 이미 <중전선언> 타결에 대해서 합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남북미와 더불어 중국도 중전선언에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지 미국은 중전선언에 사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중전선언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만일 남북미 삼자만 중전선언을 할 경우, 중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어려워진다. 만일 중미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를 뒤덮게 되면, 미래 한반도에는 심각한 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확장을 반드시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설령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지역안보에 있어

핵심지역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중국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비핵화가 실현되고 북미 관계도 정상화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북중 간의 관계를 휘방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려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군사배치를 유지하고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제어하려 할 것이다.

미래의 평화체제는 틀림없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발표한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이며, 남북한 평화협정 타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협정의 산물이다. 또한 동아시아 냉전의 일부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왔다. 만약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고 북미간의 정상적 관계가 이루어지며,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협력체제를 이룩한다면, 주한미군의 새로운 위협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전략은 적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확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해지되지 않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성질, 규모,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 물론 미군의 거취와 동맹의 존폐 문제는 주로 한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군의 지위에 대한 미래 남북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중국의 유일한 요구는 미군이 중국을 위협하거나 침략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대만해협에 개입하면 안된다. 주한미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균형을 바라며, 군사적 상호신뢰를 바라고 있다. 미군의 행동은 반드시 한국 정부의 절제(节制)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모든 중국을 상대로한 전략적 무기배치는 - 싸드 - 철회해야 한다.





## 병진에서 선경(先經)으로: 북한의 신전략노선

김 병 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년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비핵평화프로세스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므로써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에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제재와 압박정책의 효과다. 유엔과 미국이 전개하는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공격 위협이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심리적 타격을 주었고 북한이 이 제제·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상테이블로 나왔다는 해석이다.

둘째, 북한 내부 정책변화의 결과다. 핵무기 보유로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협상에 임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30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국방에 쏟았던 국력을 경제개발에 투입하여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을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쿼트버재단 연설(7.6)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을 제안하는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일련의 평화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넷째, 중국 역할론이다.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의 네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아마도 위의 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조성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요인, 즉 북한 내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치른 당대회는 그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36년 동안 당대회 개최를 미룬 이유는 경제문제였다. 김정일은 1984년 2월,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수령님

께서는....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그 의지를 거듭 밝혔다. 36년 동안 고집스럽게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인민생활이 향상된데 당국과 주민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7차 당대회를 치른 북한은 6월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7월 6일 정부대변인 성명서로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했다. 다섯 가지 조건이 마련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전격적인 제안이었다.

그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내 미국 핵무기 공개 2) 핵무기와 기지 철폐, 검증 3) 핵타격수단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담보 4)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위협공갈 않고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5) 핵사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 철수 선언 등이다. 북한의 시간표에 따라 대담한 제안을 했으나, 미국의 시간표는 대선정국으로 이에 책임 있게 반응할 여유가 없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더 압박하였다. 2017년 7.4일과 8.29일, 9.3일, 11.29일 ICBM과 핵실험으로 거세게 도전하였다. 11월 30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추이를 관망했다.

2018년 4월 20일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제시한 경제-핵 개발 병진노선을 마감하고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언,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1차적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기간에 기존의 공장과 기업소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1년부터는 전면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부르며 정책이 변화되었음을 강조한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란 이제부터 “나라의 인적, 물질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전략적 노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요구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을 해야하므로 자립경제를 계속 강조하며 산업 각 분야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과학교육사업을 경제 강국 건설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당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노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성공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4월 20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2018년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임한 것은 새로운 전략노선인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 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은 진짜 달라진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제재와 압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1년에 ‘국가경제개발10개년전략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성택 사망과 함께 유아무야 되었지만, 그에 따라 경제특구가 국가급 5개, 도급 22개로 신설되었고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정책이 철회되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비핵화라는 대담한 제안을 하며 제재·압박을 철회시키고 경제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내부자원 동원과 과학기술 개발, 교육을 중심으로 자립적 경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5년 안에 기존의 공장과 기업소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기대난망이다. 과거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수년 동안 추진했던 것의 재판이다. 2018년 신년사에서 올해가 5개년전략의 세 번째 해임을 거듭 상기시키는 대목에서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지 않아 조급하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유럽 유학경험을 가진 35세의 젊은 지도자, 앞으로 20년 이상 통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젊은 지도자는 초조하고 다급하다.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 한시가 급하다. 2020년 안으로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비핵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 모험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역학과 한반도의 역할

사회: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신욱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G2의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손인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아시아 충돌 지점의 전이

이정훈(서울대 중어중문과)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동양평화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신 옥 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냉전기 한국의 안보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냉전의 종언은 세계질서의 커다란 전환의 양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극체제, 일극체제, 새로운 양극체제의 논의를 거쳐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무질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냉전의 종언 직후의 ‘과거로의 복귀’(back to the future), 9.11로 이어지는 ‘일극적 순간’(unipolar moment),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와 ‘아시아의 세기’ 논의를 지나서 ‘미국의 부활’ 가능성, 중국의 ‘신창타이,’ 복수의 ‘지역’의 등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모호하고 복잡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분석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안보에 대한 고찰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구조적 맥락의 변화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루만(Luhmann)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기존 안보‘체계’가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환경’ 요인에 따라 그 ‘경계’가 새롭게 구획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국제정치이론 논쟁 중의 하나인 ‘주체-구조의 문제’(agent-structure problem)에 연결시키면, 한국이라는 주체가 지역체제의 구조 변화와 어떠한 방식의 상호구성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의 주제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지칭되는 기존의 안보체계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어떠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이라는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범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 결과를 생각해 보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안보-경제-관념의 연계 방식과 변화의 측면을 분석하며, 동아시아 안보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을 고찰해 보고, 이에 관한 한국의 기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적 시도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부상하는 중국

- 샌프란시스코 체제
- 미국의 역할 vs 중국의 부상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은 냉전기에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불가피한 전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일 사이의 지역적 패권 경쟁을 넘어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 패권전이, 그리고 질서전이의 양상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한국의 입장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즉 미국과 일본이 유지 내지는 강화를 선호한다면 한국은 유지 내지는 전환을 모색하게 될 수 있는데, 한국이 고려하는 전환의 방향은 해체나 대체보다는 내부적 조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현상유지를 넘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입장은 내부적 전환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의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의 전략적 능력의 확대를 통한 체제의 ‘내부적 균형’(internal balancing) 추구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함께 국방개혁을 통해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인 원자력/미사일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포괄적 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 양자 모두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병행되는 한국의 상대적 자율성 증대 모색의 측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조기 전환의 입장을 취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와 한국이 갖는 취약성 보완과 함께 행해져야 하며,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재편 문제가 그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내부 자율성의 신중한 모색을 위해서 한국은 2010년대 초반 일본 민주당 정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토야마는 취임 초기 ‘대등한 미일관계론’과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아미티지(Armitage)와 나이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은 현재처럼 GDP 1%가 아닌 4%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동아시아에서 “만약 미국이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아마도 보복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이후 노다 내각은 미일동맹 강화의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2012년 11월 미일 양국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신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책적 모색의 세 번째 부분은 일본과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샌프란시



스코 체제의 내부적 균형과 더불어, 체제의 환경 요인인 한중일 관계 혹은 동북아 지역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과 국내정치의 변수에 기인하는 소위 ‘양면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정치/안보와 다른 분야를 구분하는 two track,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track two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환적 시도의 마지막 측면은 대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제재 국면을 넘어서 북한과의 다양한 양자적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변화는 한국 정부에게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분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 및 다른 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제재와 협력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관련 당사국 들 사이의 양자적 정치 관계의 전환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G2/신냉전(新冷戰) 신화(神話)와 동아시아지역 거버넌스

손 인 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세상에는 가장 강대한 국가 둘이 있고, 그들의 힘이 엇비슷하다는 담론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美·中(中·美)관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은 分權的 多元的 국제질서의 등장과 중견국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중 관계의 협력적 측면을 강조한 'G2', 그리고 미·중 관계의 대립적 측면을 강조한 '新冷戰,' 두 용어들 모두 강대국 중심 논리를 반영하며 실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10여 년 전 미국이 중국을 'G2'로 부르며 중국을 치켜세운 것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대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는 메시지였다.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중국은 이 용어를 거부했다. 중국은 외형상 초강국 반열에 올랐지만 안으로는 고속 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하며 '중진국의 덫'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은 G2 개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시킨다.

한편, 최근 등장한 '신냉전' 담론 역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경시하고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매몰될 리스크를 갖고 있다. 20세기 미·소 관계와 21세기 미·중 관계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크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조건에는 부합해야 미·소 냉전과 유사한 미·중 냉전이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중 외에 주요 국가들을 양극 중 한 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양극 세력 분포'(bipolar distribution of power)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일부 국제기구들의 공동 멤버십을 제외하고는 미·중 및 그 동맹국들이 서로 '분리'되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나타나야 한다. 셋째, 중국과 미국이 군사·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이해상충적인 제로섬(zero-sum)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8년 시점에서 볼 때, 상기한 조건들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G2'와 마찬가지로 '신냉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신화일 뿐이다.

미·중 대립과 글로벌 리더십 부재는 분권적 다원적 국제질서 형성의 추세를 더욱 가

속화 시키고 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쇠퇴기의 제국(가령, 로마)들이 제국 전성기 때 주장했던 보편적 비전과 규범을 부정하고 자국의 이익과 특수성 강조로 입장을 전환했듯, 오늘날 미국은 보편적 가치 추구에 점점 소극적이다. 지난 9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은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America is governed by Americans...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또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자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시키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개념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2018년 9월 시진핑 주석: “美国逼中国人走自力更生之路不是坏事”). 미·중은 당분간 반(反)글로벌주의 추세를 반전 시키기 보다는, 가속화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중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글로벌주의와 전통적 주권에 민감한 정치세력의 부상은 기존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안보, 무역, 금융,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더욱 제도적으로 약하고 분권적이며 중첩된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 병존, 경쟁, 보완할 개연성이 있다. 비관적 시각에서는 몇몇 新중상주의 (neo-mercantilist)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우 분열된 국제질서 및 거버넌스의 등장을 예상할 수도 있다. 헤게모니 리더십의 부재 속에 혼란과 (게임의 규칙에 대한) 갈등이 만연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다양한 양자 또는 (미니) 다자주의 협력체가 공존하며, 심각한 혼란보다는 선택적 협력이 가능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 보편적 이념에 근거한 포괄적이고 단일한(one size fit all) 협력체제가 아니라, 각 지역·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다원화된 협력체제들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권적 다원적 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 뿐만 아니라, 중견국들의 전략과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동아시아 총돌 지점의 전이

이 정 훈  
(서울대 중어중문과)

[ 별 첨 ]



#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동양평화

백 지 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의 역행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과 건국 이래 최초의 북미회담에 대하여 2차 북미회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획기적인 사건들이 예고된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격동 중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에는 몇 차례 크고 작은 진전의 계기가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의 증대한 차이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남북미에 제한되지 않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지정학 및 지정학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지지와 미국의 협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가 밑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문제 역시 주변 국가들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당시의 동서독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 동서독 통일 협상을 주도했던 서독 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의 2+4(동서독 + 소, 미, 영, 프) 협상에 대해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서독 외무장관은 사실상 2+0.5(서독, 소련 + 미국)이라고 말했다. 동독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서독과 소련 간 협상이 다른 변수들을 상당 부분 견인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냉전 및 탈냉전에 걸쳐 드러난 북중관계의 모호성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시켜왔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중국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올초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한국 여론에 팽배했던 ‘중국패싱론’은 그 단적인 예이다. 북중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패싱론’은 수그러들었지만, 한국의 언론이나 대중 여론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소극적, 나아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만연해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소극적,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데는 직접적인 계기들이 있었다. 우선, 지난 10년 열어붙은 북핵 정국 속에서, 중국은 시종 북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제한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중국 관계자들은 냉랭해진 북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었다고 하지만, 지역의 대국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중국에 장기적 대북정책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둘째,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시켜 수교 이후 쌓아온 양국간 우호의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2018년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2018 통일의식조사(주변국 의식조사, 이하 ‘조사’)에 의하면, 2012년-2016년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협력-경쟁-경계의 이미지가 대상으로 비슷한 정도로 공존했다면, 사드 정국 이후에는 경계와 적대의 이미지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강자간의 싸움에서 약자를 공격하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으며, 양국간의 ‘정냉경열(政冷經熱)’이 언제든 ‘정냉경냉’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한반도와 주변국 사이의 불신은 물론 중국만은 아니다. 상기의 ‘조사’는 북한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인식이 2018년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전화된 반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고조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이 여느 때와 같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우애와 신뢰가 뒷받침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 2. 아시아 냉전의 중층성

북중, 중러, 한중, 한일, 중일, 북일 등 동북아 각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적대와 불신 구조는 북-중-러 북방삼각과 한-미-일 남방삼각 간의 대결이라는 전통적 냉전구조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아시아 냉전의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지구적 냉전과 연동되면서 독자적으로 작동했던 아시아 냉전은 사회주의-자본주의 대결이라는 진영논리로 전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복잡한 내면구조를 지닌다. 중소대결의 양 축에서 미소냉전과 미중냉전이 서로 연동하면서 경쟁했고, 사회주의 진영의 두 거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북한 등이 각축했다. 스탈린 사후 미소 ‘평화공존’체제의 형성은 중소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중국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으로써 역설적으로 중미수교를 이끌어냈다.



중국의 '聯美抗蘇' 전략은 소련을 고립시켰고, 결국 소련은 개혁개방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에 연착륙한 중국과 달리 체제붕괴를 맞는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 북한의 고립과 위기의 원인(遠因)으로 미소 및 미중 간의 지구적 냉전 못지 않게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냉전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소분쟁 구조 속에서 둘 중 하나를 택했던 사회주의 진영의 소국들과 달리 중소 양쪽에서 등거리 전략을 취하며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던 북한은 결국 지구적 탈냉전의 흐름에 올라탈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한미일 동맹체제는 한일간의 식민지 과거 청산을 가로막음으로써 한일간의 뿌리깊은 갈등을 온양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탈냉전 시대 동북아에 지속/재생산되는 냉전은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냉전구조에 더하여, 각 진영 내부에 갈등을 은닉하는 아시아 냉전이 중첩된, 중층적 역사의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3.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지경학

- 4.27 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담긴 USB 를 건네주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 대통령 직속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신북방정책(동북아 슈퍼그리드) + 신남방정책 + 북극항로 개설로 구성되었고, 포괄하는 지역은 서부권역(러시아, 벨라루스), 중부권역(몽골, 중앙아시아), 동부권역(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 성)으로 구성.
-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등과 연결 가능한 인프라 경제 발전 구상. 북한을 여기에 끌어들이므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겠다'는 것.
- 2018.10.4 민주당 송영길 위원, 민주당 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본격 시동.
- 중국 내에서도 2015 년 <전략과 비전> 이후 '일대일로'의 동북아 공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실패로 인해 동북아에서 약화된 중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동북아경제회랑'을 공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
- '일대일로'의 육상노선 중 하나인 '중몽러회랑'은 궁극적으로 出海 전략. 울란바타르-

텐진, 초이발산-다렌, 초이발산-錦州항만 연결에 이어 나진항(羅津)과 자루비노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벨트로 완성.

○ 신동북진흥전략:

개혁개방 이후 낙후한 동북 3 성 재건을 위해 신흥공업화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전략. 2003 년 실시 이후 10 년간 평균성장률 12.6%로 전국 수준(10.5%)보다 상회. 2011 년 뉴노멀 이후 둔화. 2014 년부터 중국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경기침체 국면에 빠지는 '신동북현상' 초래.(2016 년 동북 3 성 경제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권.)

○ 2018 년 8 월, 랴오닝성, '일대일로종합시험구건설총방안' 제시. 한중일+X 모델에 기반한 '동북아경제회랑'제시. 일대일로 관련 국내 최초 성급 시험구.

#### 4. 동북아신경제구상과 동양평화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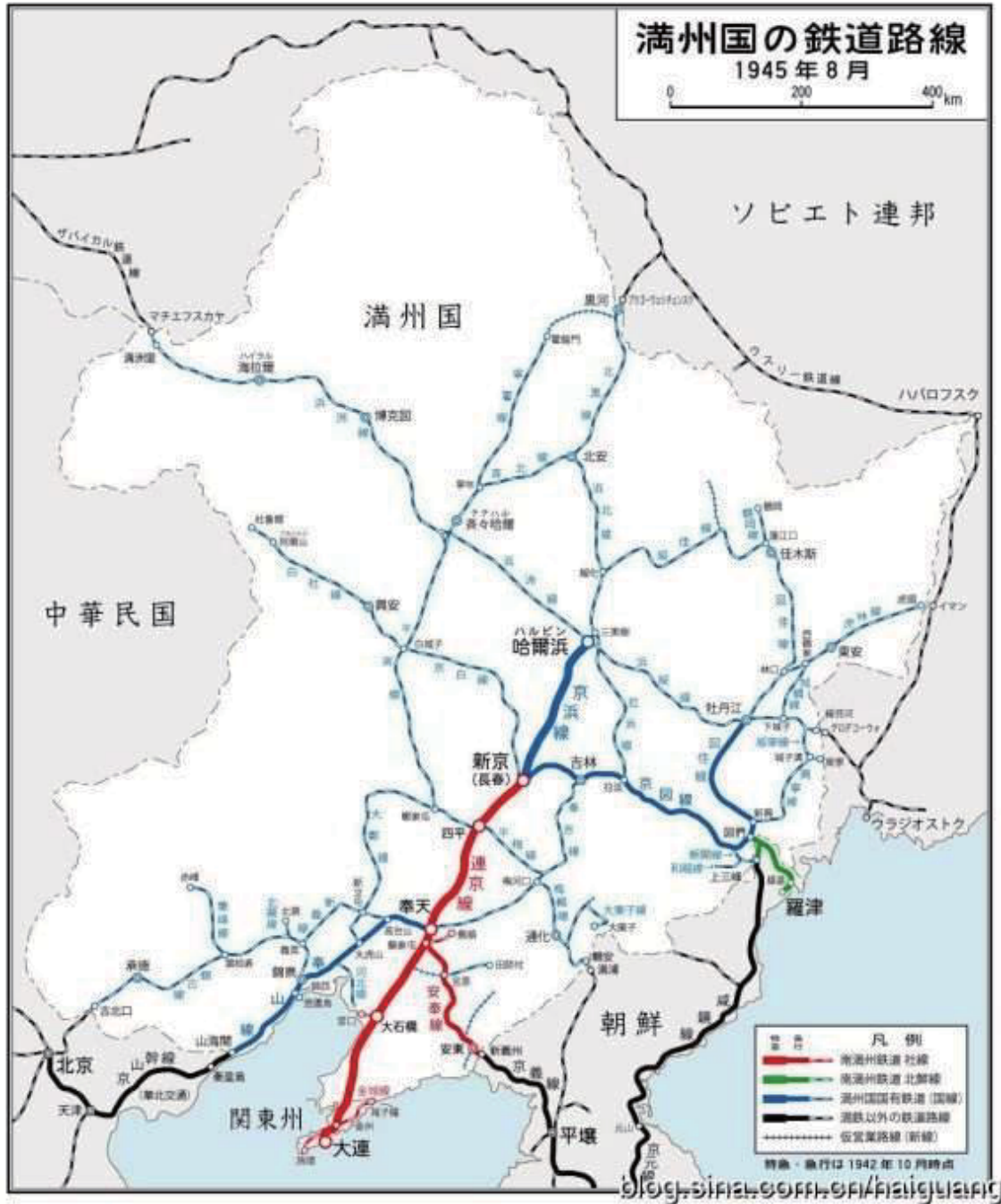
○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일대일로'와 같은 사고에 기반. 즉, 경제발전이 곧 안보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

○ 지난 세기 동북지역의 역사적 상징. 러일전쟁, 만주국, 식민지 시대 군수 공급을 위한 중화학 공업기지, 신중국 건설 초기에도 전략적 중화학 기지, 개혁개방 이후 낙후한 산업구조, 북중관계 경색으로 인해, 낙후, 폐쇄, 단절. → 개방적 국제적 초국적 경제협력지역으로?

○ 동북지역의 역사적 유산: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대륙 북상이 충돌하면서 러일전쟁 발발(1904). 1910 년 안중근은 옥중수고인 '동양평화론'에서 다음을 제안. 1) 일본과 러시아가 쟁탈을 벌였던 뤼순항을 동양평화의 근거지로 만들고 한중일이 공동 관리, 2) 3 국 청년들이 군단을 편성하여 지키게 하고 2 개국어 이상을 배우게 함. 3) 한중일이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인도, 태국, 버마 등 동양 諸國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발전시킴. 4)공동금융기구 설치 운영. 5)일본 천황이 동양평화 기구의 대표자로서 천주교 교황의 인준을 받음. → 지역협력 이념으로서의 의미와 한계(恐露論에 기반한 인종주의).

○ 중몽러회랑-신동북진흥전략-한반도신경제구상이 결합하는 동북아협력 모델이 지속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해당하는 각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 문화

유산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기반한 공동의 이념을 창조하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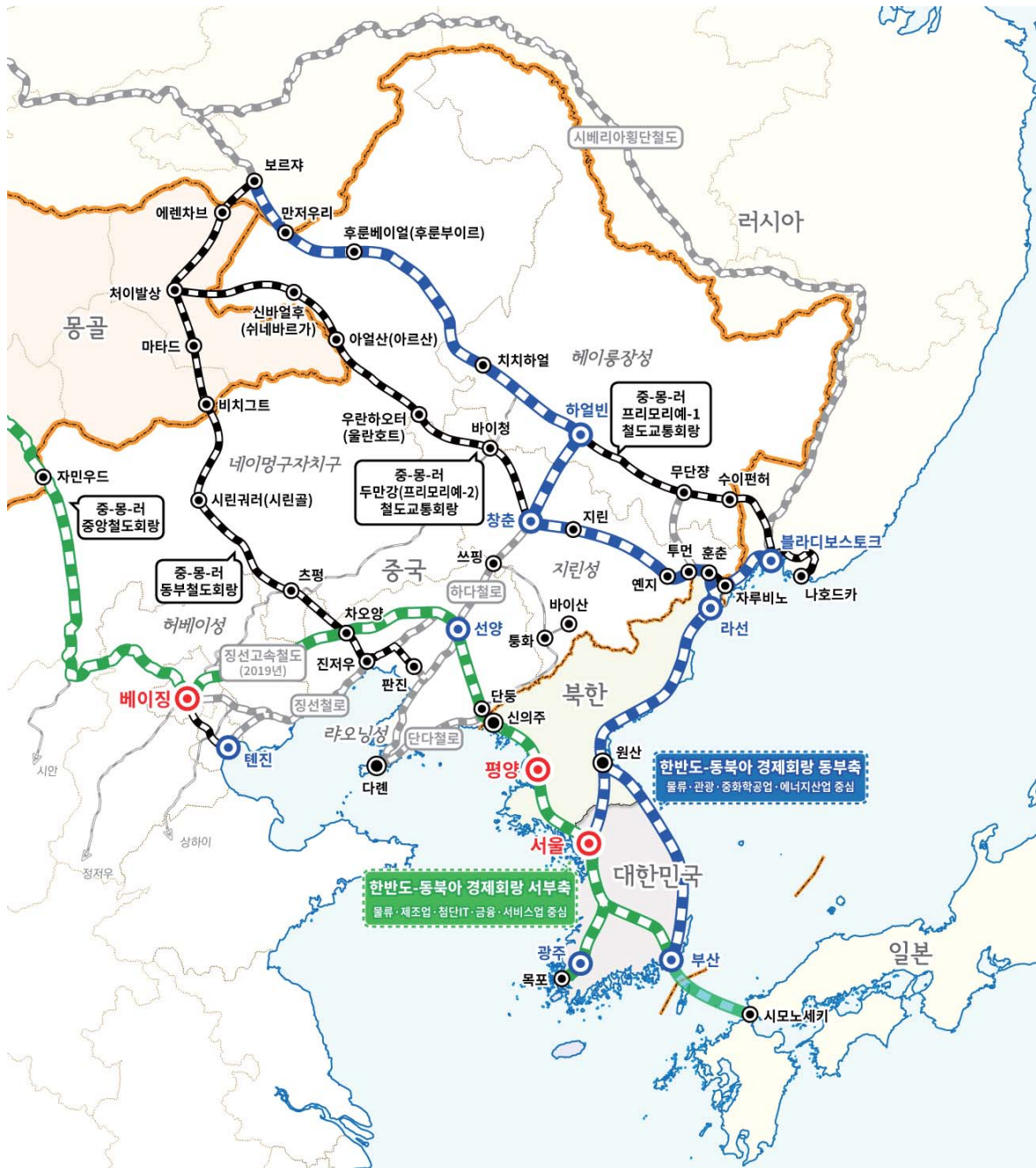


Figure 1 중몽러 회랑과 연계 가능한 인프라 회랑(서종원 외,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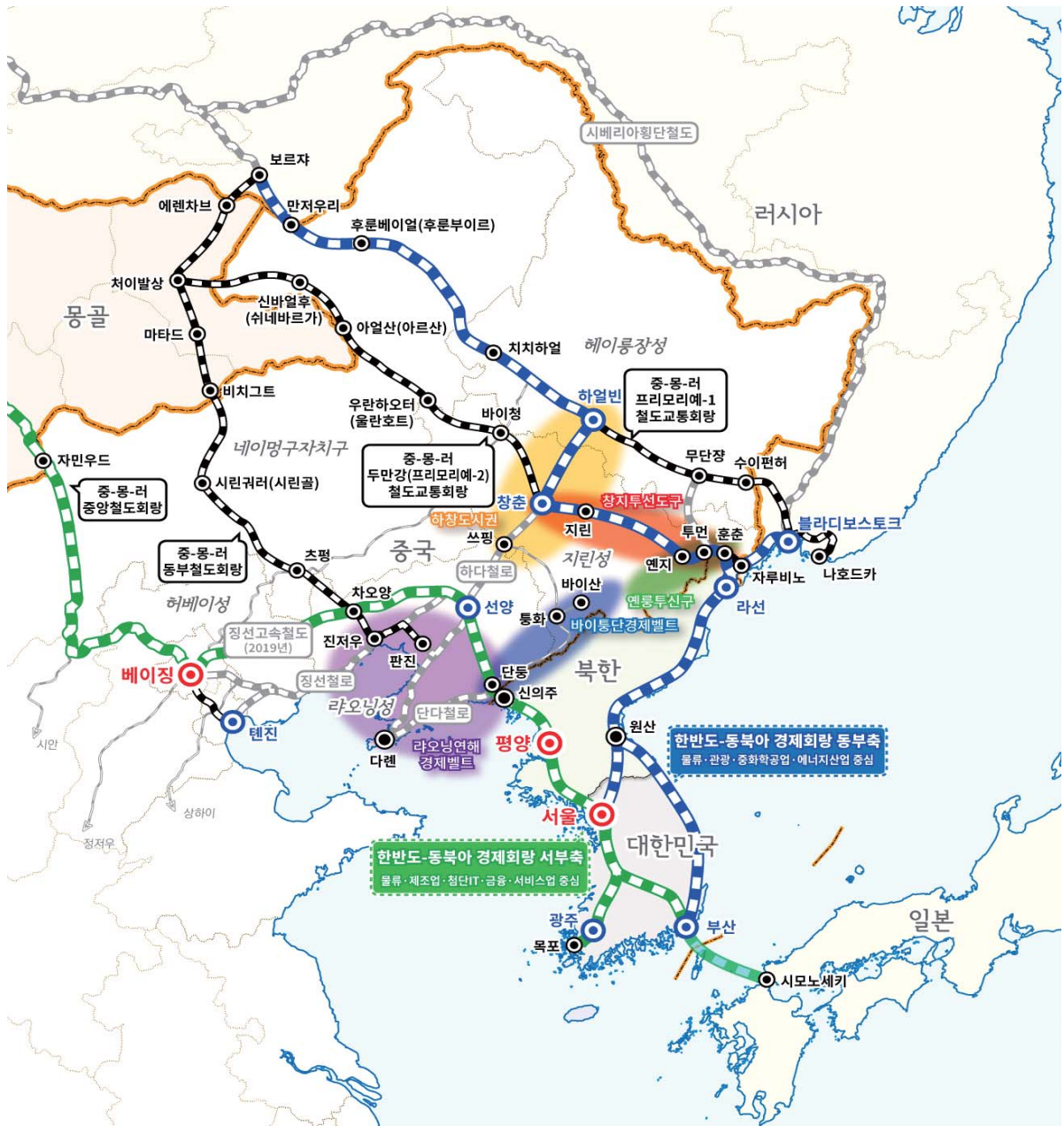


Figure 2 동북삼성지역발전계획과 남북중 인프라 연계도(200)



Figure 3 남북중인프라 회랑 거점 지역의 주요산업(172)

자료 출처:

서종원 외,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2017.12

최규빈, (2018 통일외교조사)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2018.10.2

## 第一轮：中韩交流的历史意义与局限

主持：白池云（首尔大统一和平研究院）

中韩建交的历史过程

沈志华（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中韩建交中的中国外交决策再探讨

董洁（中共中央党校）

中韩文化互动与历史借鉴

李效杰（山东工商学院）

十八世纪中朝书籍史的互动与通融

赵成杰（云南大学历史与档案学院）





中韩学者对话

首尔大学，2018年10月18日

## 迫切需要推进新型中韩关系的发展

(发言提纲)

沈志华

(华东师范大学)

### 一 历史的回顾

1. 中韩建交过程的简要陈述：从民间到政府
2. 为什么1990年中国的态度突然积极起来：邓小平的思考
3. 十几年来中韩关系发展对于双方的影响：经济和外交
4. 如何认识高句丽和萨德问题：极端民族主义的恶果

### 二 现实的需要

1. 目前半岛局势的状况：中美朝三角关系的变化及结果
2. 韩国在处理半岛问题中作用的提升：对美关系—双方的困境
3. 如何敦促朝鲜走向改革开放：中韩政策协调沟通的必要性
4. 如何处理结束半岛战争状态问题：中韩从敌对到合作的立场
5. 中韩关系发展的动力和障碍：经济 外交 安全 意识形态

### 三 学者的责任

1. 中国的周边环境：想象中的友谊和现实中的感受
2. 友好关系建立的前提是理解，双方理解的前提是沟通：三个渠道
3. 学者之间的交流和沟通是双方理解的理性平台



## 发言提纲

董洁

(中共中央党校)

冷战时期,东北亚地区形成了一个以苏联、中国、朝鲜为核心的“北方三角”以及一个以美国、日本、韩国为核心的“南方三角”。20世纪70年代,中国先后与美国、日本实现关系正常化,并分别与日本、美国建立外交关系,中韩关系正常化却迟滞不前,直到1992年中韩两国才实现建交。本发言从中国外交决策的视角探讨中韩建交迁延的原因以及促使中国最终决定建交的关键因素。

20世纪70年代中期至80年代末,中韩关系处于一个小心探索期,在不过度刺激朝鲜的范围内探索扩大与韩国在包括体育、文化、经济以及非官方领域的各种关系。对于中国决策层而言,尽管这一时期中韩经济文化交流不断扩大,尤其是双边贸易额增长迅速,但此时中韩贸易的经济价值远不及维护朝鲜半岛稳定的战略价值来得重要,在没有产生更大的助推力之前,中韩建交没有进入实质性阶段。

1989年春至1991年末,世界格局出现剧烈变动,中国国内局势也处于相对特殊时期。在波谲云涌的世界剧变中,中韩关系正常化出现了比任何时候更强的推动力。从中国外交决策的视角观察,其推力既源于中国打破自身困局的内在需要,也在于客观因素的促成。

具体而言,包括:一,突破西方制裁的需要,中国急于摆脱内外交困的处境,考虑到美日韩三国在朝鲜半岛“交叉承认”问题上的协调一致,中韩建交很可能成为美日全面取消对华制裁的重要交换条件之一;二,苏东剧变带来的影响,苏联东欧国家相继与韩国建立外交关系,苏联和东欧社会主义国家同韩国发展关系成为无法阻挡的趋势。这一判断对改善中韩关系具有参考价值,同时,韩苏建交使得朝鲜再难向中国打“苏联牌”;三,朝鲜半岛局势的缓和,朝鲜半岛在1991年南北朝鲜共同加入联合国后,出现了缓和趋势,这为中国调整对朝鲜半岛政策创造更多有利空间;四,中韩经贸的巨大前景,中韩经贸关系发展迅速,于1985年首次超过中朝贸易额,对与韩国经贸关系密切的省份而言,中韩外交关系的缺失严重制约了双方经贸关系的进一步发展,在1992年中国国内改革陷于停滞的状态下,中韩建交有可能成为推进中国改革开放进程新的“发动机”。

中韩建交是中国外交的重要战略棋子,其最终实现关乎若干问题,包括中朝关系的处理、韩国和台湾关系、中国对美日韩同盟的看法、朝鲜半岛南北关系走向、中韩关系定位等等。

## 发表题目和摘要:

# 中韩文化互动与历史借鉴

李效杰

(山东工商学院)

随着韩半岛局势的缓和,中国与韩国的文化互动也在加强,两国在教育、体育、影视、旅游等方面的互动全面而深入,产生的一个重要影响就是:两国国民均加深了对彼此的了解,这有利于消除因文化差异造成的分歧,从根本上说有利于两国关系的发展。

但同时也应看到,中韩文化互动也存在着一些问题,如浅层次交流多、深层次互动少,两国国民对彼此仍然缺乏深入了解;学术互动交流多、吸收少,除与两国有关的研究课题外,双方对彼此学术研究的参考和引用有限;在文化互动的主观意愿上,双方好像均不把对方作为国际文化互动的主要对象。

造成这种局面的原因有很多,如语言的障碍、文化的差异、政治制度的区别、意识形态的分歧等。但这些并不能作为中韩文化互动层次不深、规模不大的借口。中国与韩国在历史上是友好邻邦,双方之间的文化互动源远流长,我们完全可以从古代中韩文化互动中,寻找解决当今问题的历史经验。

公元七至九世纪,唐代中国与新罗的关系经历了一个从辽东之役时的合作,到百济、高句丽失国后的冲突,再到新罗统一韩半岛后和平相处的发展过程,最终形成了较为稳定的朝贡关系。相应地,随着唐与新罗经济文化互动的加强,唐对新罗的认知也经历了一个由最初“好祠山神”到后来“仁义之乡”的变化。

新罗统一韩半岛、“东亚世界”形成后,唐与新罗、日本围绕东亚海域进行了持续的经济文化互动。相对于日本,唐与新罗的互动更为频繁,关系也更为密切,整个唐代成行的日本遣唐使共 13 次,平均 20 多年一次,而仅 7 世纪新罗入唐使者就有 50 多次(不完全统计)。频繁的经济文化互动,提高了唐对新罗的认知水平,客观上促进了唐罗关系的发展。

唐罗文化互动,应该放到一个更大的范围、更长的时段内进行考察。以新罗及高丽、朝鲜的代称“东国”为例,在古代中国语境中,先秦时期“东国”“西国”分别指位于王畿之东、之西的诸侯国,为“天下观”之内的概念。丝绸之路开辟后,随着中国与中亚、西亚各国互动的日益深入,“西国”成为西域及更西国家的代称,突破了原有“天下观”的界限,“东国”在与“西国”比较时,也由王畿之东的诸侯国,变成了整个中国的代称。“东亚世界”形成后,在东亚文化互动中,包括儒学、汉字、佛教、律令在

内的唐文化向东传入新罗和日本，“东国”也在唐代中后期成为新罗及后来高丽的代称和自称。

“东国”只是长时段、大范围文化互动中唐对新罗认知的个案，将新罗、高丽称为“东国”，是以中国为中心观察东部民族和国家形成的地理、族群等综合性概念，同时也是一个认知概念；高丽自称“东国”，则是对这一认知概念的接受和承认。这也说明唐与新罗的文化互动从一开始就是一种“多边”的互动，唐对新罗的认知也经历一个在互动中彼此调适的过程。从新罗与唐关系发展轨迹来看，唐罗文化互动与两国关系发展是相互促进的关系。

但唐罗文化互动也存在不足之处，如互动主要以官方为主，民间的文化互动处于次要地位；新罗对唐文化吸收多，而输出较少；互动的范围仅限于交通路线周边地区和两国的政治中心；新罗把唐作为主要文化互动对象，而唐只是把新罗作为文化互动的对象之一。

两个国家之间的关系，一定程度上受这两个国家对彼此认知的影响，而正确认识对方的关键，在于加强两国之间经济文化互动。历史研究的一个重要作用是以史为鉴，唐罗文化大范围、长时段互动与两国关系发展相互促进的经验，完全可以为今天中韩文化互动和两国关系发展提供镜鉴。文化互动促进相互认知，而相互认知的深入，又会推动两国关系的发展。就当今的中韩文化互动来说，重点在于扩大互动的边界、深化互动的层次，在多边文化互动中，促进中韩全方位的文化互动，增进两国国民对彼此的了解，从而促进中韩关系的发展。

**提问：**当今韩国对中国的主流认知是什么？会在多大程度上影响中韩关系？

## 内实性与连续性：清中叶中韩书籍史的互动与交融

赵成杰

（首尔大学中文系，韩国首尔，08866）

清代乾嘉时期，社会发展相对稳定，经过顺治、康熙、雍正三朝的治理和恢复，清王朝的统治得到了全面巩固。这一时期中韩两国使节团的频繁往来，为两国文人提供了相互接触和思想文化交流的机会。朝鲜“北学派”文人学者，如洪大容、朴齐家、柳得恭、李德懋等人，以使节团随员或检书官身份出访中国，同中国文人进行思想文化的交流。洪大容（1731—1783）与清文人来往书信现存 130 封，主要涉及三个方面的内容：一是告知对方近况，表达敬慕之情；二是请托对方购书、题字；三是展开学术研讨，发表学术见解等。十八世纪中韩文人的交往标志着中韩文化交流的深化，本文以洪大容与清代学者交流为中心，围绕中韩文人的书籍传播及书信往来，期冀考察中韩两国书籍的流动及学术交游。

洪大容，字德保，号弘之，又号湛轩，朝鲜后期实学思想家，北学派的先驱。早年从学于朝鲜儒学大师金三渊的孙子金元行，致力于天文、律力、算数、等实用学问的研究。洪大容为了实践“北学”主张，出访中国，与清代学者如严诚、潘庭筠、朱文藻等人交往频繁，《湛轩集》记载了洪大容出访期间与清代学者的书信往来。洪大容于乾隆三十年（1765）十一月二日跟随“冬至兼谢恩使使行团”离开汉阳，十二月二十七日到达北京。此次出使的三使分别是正使顺义君李烜，副使参判金善行，书状官执义洪穉。这一行人在乾隆三十一年（1766）正月到达北京后，结识了来京科举的严诚、潘庭筠、陆飞三位杭州士人，他们在京期间以及分别之后进行了大量的诗文交流。

中韩文人常以笔谈进行交流，在十八世纪中期至十九中期，参与交流的以朝廷文人、进士、举人为主，其中不乏一些知名的学者，如吏部尚书彭元瑞、军机大臣王杰、翁方纲、户部郎中阮福、刑部主政杨熙等人。中韩笔谈的内容十分丰富，涉及的话题主要有礼制风俗、科举时文、图书编纂等，清中叶的笔谈内容主要以文学、学术、风俗考察为主，最为有名的是洪大容《湛轩燕记》中的《乾净笔谭》，洪大容的书信、文集见证了清中叶朝鲜学者与中国学者的交往关系，而清代学者朱文藻所编《日下题襟集》则记录了中国文人与朝鲜文人的

书信往来。

洪大容与清代文人的交往一方面加深了两国在文化、学术方面的交流,更为重要的是,通过书信,他把朝鲜朝大量的学术研究精华以及自己的研究成果不遗余力地向清朝友人介绍,这在他与清文人交流以前的中韩文人交流史中是没有的,其开创之力,功不可没。如居京期间,洪大容撰写了《东国记略》,使清人了解朝鲜的文化与风俗,归国后,洪大容还托人给严诚等人带去朝鲜书籍,如《圣学辑要》。另一方面,通过书信及书籍的往还,两国文人还深入探讨学术问题,如洪大容与邓汶轩探讨刻书木板、土板之别,如《与邓汶轩书》等。

围绕洪大容与中国学者的交游,不难看出十八世纪中叶中韩学术的发展情况,一方面,中韩学者通过书籍、书信、笔谈等方式相互了解彼此文化与学术传承,切磋学问的同时也加深了两国学者的友谊;另一方面,作为东亚学术交流圈的汉籍在东亚各国的流动,产生了大量批本、抄本,学者间或校勘文本、或撰写题跋、或钤印签章,通过流动的文本,不断积累,并赋予批本、抄本新的内涵,构筑成东亚书史的重要组成部分。



**摘要：**清中叶中韩文人学者来往频繁，洪大容、朴齐家、李德懋等学者常随使团出访中国，一方面朝鲜学者与中国学者围绕学术、文学、风俗、礼仪等展开笔谈，加深了两国的文化交流；另一方面，通过相互赠书的方式，促进了书籍在东亚范围内的流动。中韩学者通过书籍、书信、笔谈等方式相互了解彼此的文化与学术传承，切磋学问的同时也加深了两国学者的友谊。

**关键词：**洪大容；书籍史；中韩交流；

清代乾嘉时期，社会发展相对稳定，经过顺治、康熙、雍正三朝的治理和恢复，清王朝的统治得到了全面巩固。这一时期中韩两国使节团的频繁往来，为两国文人提供了相互接触和思想文化交流的机会。朝鲜“北学派”文人学者，如洪大容、朴齐家、柳得恭、李德懋等人，以使节团随员或检书官身份出访中国，同中国文人进行思想文化的交流。<sup>①</sup>洪大容（1731—1783）与清文人来往书信现存 130 封，主要涉及三个方面的内容：一是告知对方近况，表达敬慕之情；二是请托对方购书、题字；三是展开学术研讨，发表学术见解等。十八世纪中韩文人的交往标志着中韩文化交流的深化，本文以洪大容与清代学者交流为中心，围绕中韩文人的书籍传播及书信往来，期冀考察中韩两国书籍的流动及学术交游。

### 一、洪大容与朱文藻的学术交游

洪大容，字德保，号弘之，又号湛轩，朝鲜后期实学思想家，北学派的先驱。早年从学于朝鲜儒学大师金三渊的孙子金元行，致力于天文、律力、算数、等实用学问的研究。洪大容为了实践“北学”主张，出访中国，与清代学者如严诚、潘庭筠、朱文藻等人交往频繁，《湛轩集》记载了洪大容出访期间与清代学者的书信往来。<sup>②</sup>严诚称其“于中国之书无不遍读，精历律算卜之法，顾性笃谨，喜谈理学，具儒者气象。”<sup>③</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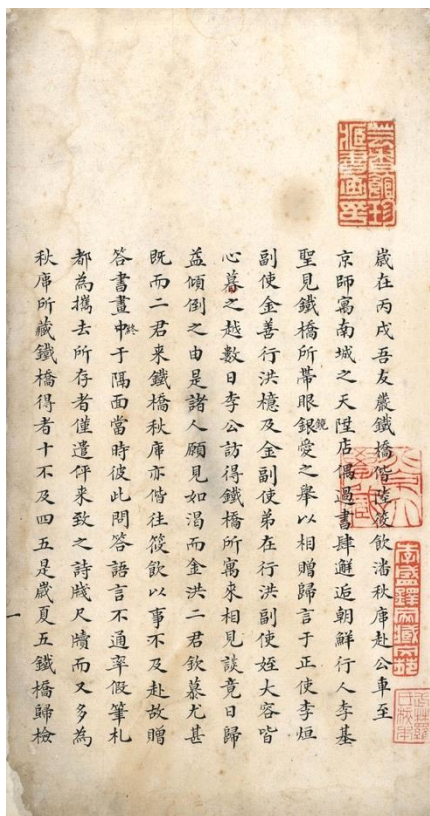
---

<sup>①</sup> 廉松心《十八世纪中韩文化交流研究》，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2004年，第39页。

<sup>②</sup> 徐毅《洪大容与清代文士来往书信考论》，《한국학논집》，2012年第46期。

<sup>③</sup> 严诚《养虚堂记》，《铁桥全集》第四册，韩国国史编纂委员会资料室藏。

洪大容于乾隆三十年（1765）十一月二日跟随“冬至兼谢恩使使行团”离开汉阳，在十一月二十七日渡过鸭绿江，十二月二十七日到达北京。此次出使的三使分别是正使顺义君李烜，副使参判金善行，书状官执义洪穉。这一行人在乾隆三十一年（1766）正月到达北京后，结识了来京科举的严诚、潘庭筠、陆飞三位杭州士人，他们在京期间以及分别之后进行了大量的诗文交流。李德懋在《天涯知己书》中记载：“洪大容，字德保，号湛轩，博学好古。乙酉冬，随其季父书状官穉游燕，逢杭州名士严诚、陆飞、潘庭筠，笔谈书牍，翩翩可爱，结天涯知己而归，亦盛事也。时金在行，字平仲，号养虚，奇士也。同入燕，为三人者所倾倒，今观其诸帖，输泻相和之乐，不愧古人，往往感激有可涕者。”<sup>①</sup>中韩学者进行交流的诗文因严诚的早逝，由其友人朱文藻（1735—1806）在乾隆三十二年（1767）十二月编辑成册，命名为《日下题襟合集》。<sup>②</sup>乾隆三十三年（1768），朝鲜洪大容请求朱文藻寄送严诚的诗文集，并寄送《铁桥遗唾》。朱文藻在《日下题襟合集》的基础上补充整理了新的诗文资料，命名为《日下题襟集》，附录于《铁桥全集》之后。



朱文藻（1735—1806），字映澹，号朗斋，又号碧溪居士，浙江仁和（今浙江杭州）人。诸生，少嗜学，精六书，尤好《说文》及金石之学，著有《说文系传考异》《济宁金石志》《碧溪文集》《校订存疑》《碑录》《金石补编》等，著作大多未予刊行，以稿抄本传世。

③朱文藻是编纂金石书的重要人物，王杰曾延请文藻至京师，助校《续西清古鉴》；后与阮元商讨金石，成《山左金石志》；又受王昶之聘，纂《金石萃编》，“属以搜采题跋，商榷考证。其后书成，又与钱同人共任校写，盖始终其事也。”<sup>④</sup>陈鸿森曾辑朱文藻诗文，其中便有写给洪大容的书信，其中记载作者编纂《日下题襟集》的经过，朱文藻《与朝鲜洪湛轩书》：

文藻生本寒微，年十六，痛遭失怙。家无督责之

<sup>①</sup> 李德懋《青庄馆全书》卷六十《天涯知己书》，韩国民族文化促进会、民文库，1967年，第12页。

<sup>②</sup> 朱文藻编、刘婧校《日下题襟集》，上海古籍出版社，2018年。

<sup>③</sup> 梁同书《文学朗斋朱君传》称其“一生绩学笃行，著书日以寸计，至老不倦”。著有《续礼记集说》《碧溪草堂诗文集》《碧溪诗话》《碧溪丛钞》《东轩随录》《东城小志》《皋亭小志》《青乌考原》《金箔考》《苔谱》《萍谱》等，著作大都未予刊行，见丁丙《武林坊巷志》。

<sup>④</sup> 徐世昌等编《清儒学案》第四册，中华书局，2008年版，第3181页。

严兄，外无规勉之良友。稍知读书，惟师古人，既而思择友以为助。敝庐去九峰、铁桥居数十武，慕二君之为人，往交之，十数年如一日，急难相济，疑义相析，文酒相乐，虽骨肉之爱无此亲者，此真所谓性命之交也。往岁丙戌，铁桥在京师寄家书，备言得交足下颠末，文藻闻之，已知足下之为人。既而归，携诸公赠答诗文、尺牋，足下之作在焉，于是益倾倒于足下，而恨不能见也。读足下之文，又不禁热泪涔涔，以为古今来未有如此作合之奇、别离之苦者，而不意铁桥之于足下遇之，而不啻文藻之于足下遇之也。故今日未与足下见而辄以书通者，实出于至性，不徒援足下之与筱饮、九峰书以为例也。

①

这封书信既交代了《日下题襟集》的成书经过，又指明了该书的成书背景和主要资料来源。乾隆四十四年（1779）洪大容寄信朱文藻，《湛轩书外集》卷一《与朱朗斋文藻书》：

九峰，铁桥之兄也，吾以为兄；朗斋，铁桥之弟也，吾以为弟，不亦宜乎！友朋之交，一则在志，一则在道。其志同，其道合，尚或友古人于千载，况生并此世，万里一心，遥相印订，是道义之交也，是性命之交也。……大容生长下国，见闻偏陋，性又肮脏，不能苟合，半生交游号为密友者，不过数人而已。……日下之游，实欲求之于京华人文之林，幸得西湖三君子，一见订交，信誓皦然，七日雅会，几乎乐死。

丙戌自京归，即以七日笔话及往来简札编次成书，以天墮店在乾净衚衕，命之曰《乾净笔谈》，伊时交会始末略具焉。今删其烦芜，写作三册，尾附与铁桥最后一书。《题襟集》中误漏处，可据以改定。朗斋平生学术，愿闻定论。我辈既为铁桥之友，死生之际，缠绵如此，得此恩赐，何以报之？惟其收拾身心，各有所成。②

乾隆三十一年（1766）洪大容跟随使团出访中国，因言语不通，多以笔谈形式进行交往，“率籍笔札，多为洪君携去”。乾隆三十二年（1767）十月，严诚临终前招朱文藻于床侧，“被中出洪君书札令读之，眼角泪潸潸下”，可见严诚与洪大容感情之深。乾隆三十三年（1768）正月二十五日朱文藻寄信洪大容，告知严诚已于去年辞世，“疾革之夕，文藻坐床侧，被中出足下书令读之，读竟，泪下。又于被中索得足下所惠墨，爱其古香，取而嗅之，仍藏之被中。呜呼！其弥留之情深如此。今日者思其精灵，或在天为星辰，或在地雁河岳，或凭依于君侧，或托生于东方，皆不可知，而要之两人缠绵之意，可以传之无穷矣。”③朱文藻与洪大

① 陈鸿森《朱文藻碧谿草堂遗文辑存》，程水金主编《正学》第四辑，江西人民出版社，2016年，第397页。

② 陈鸿森《朱文藻年谱》，程章灿主编《古典文献研究》第十九辑下，凤凰出版社，2017年，第200页。

③ 陈鸿森《朱文藻年谱》，程章灿主编《古典文献研究》第十九辑下，凤凰出版社，2017年，第179页。

容在严诚去世后还有多封通信，如乾隆三十四年(1769)冬，洪大容赐信朱文藻，索要严诚遗集等。据徐毅统计，洪大容归国后，与清文人来往书信现存 130 封，作于 1776 年至 1780 年，这批书信零散且无体系，显而易见的是大批书信已经亡佚，因书信多是请人托付，所以较易遗失。如赵煜宗给洪大容的信件中提到：“去臆接得华翰，识初秋之书未曾手接，怅怅奚似。”<sup>①</sup>三河县是当时中韩传递书信的主要枢纽，此处是朝鲜使者进入北京的必经之地，洪大容曾言：“三河之距京为百余里，此中之传札，固其顺便，而若其寻讨杭便，恐不如身在都下，是可虑也。吾兄到京后如无他可信者，计更思万全，须勿惮一两日车马之劳，亲往三河，访此二人，从容相托。”<sup>②</sup>

中韩文人常以笔谈进行交流，在十八世纪中期至十九中期，参与交流的以朝廷文人、进士、举人为主，其中不乏一些知名的学者，如吏部尚书彭元瑞、礼部侍郎铁保、礼部汉尚书纪昀、军机大臣王杰、翁方纲、户部郎中阮福、刑部主政杨熙等人。中韩笔谈的内容十分丰富，涉及的话题主要有礼制风俗、科举时文、经学文学、清朝宗教、政治时局、图书编纂、朝鲜情形等，清中叶的笔谈内容主要以文学、学术、风俗考察为主，最为有名的是洪大容《湛轩燕记》中的《乾净笔谭》，如洪大容与中国学者严诚、孙蓉洲讨论儿童识字教学，“力闇曰：此间谓之《鉴略》，亦与小儿读之。又曰：《小学》最好。又曰：《小学》外篇虽都说大学事，然多识前言往行，自宜于幼时教之，则不易忘。且士先器识，或有颖悟之童，竟能中心慕效，未必非终身之益；此昔儒之所以教幼童时讲日记故事也。圣经贤传，幼童如何解得？”<sup>③</sup>《与孙蓉洲书》：“小儿始入学，教何书？《六经》亦当有次第，史书先授何书？初学写字临何书帖？临写之法有影摩诸法云，然否？（孙答曰：小儿入学，先教认字。如《三字经》，三字为一句，皆明伦教学经史之类，颇有意义。《千字文》四字为一句，梁朝周兴嗣奉勅撰之类。及其认字既多，则授以《四字书》。”<sup>④</sup>再如洪大容记载北京琉璃厂情况，“厂在正阳门外西南五里，而近厂夹道而为市铺。东西设闾门，扁曰琉璃厂，盖因以为市号云。市中多书籍碑版鼎彝古董，凡器玩杂物为商者，多南州秀才应第求官者，故游其市者，往往有名士。”<sup>⑤</sup>金东旭(김동욱)曾考察十八世纪中韩文人的知识流通路径，他指出：“湛軒이 筆談과 書信往來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中國의 文士들과 知的인 交遊를 한 前例는 그대로 燕巖의 熱河日記에 이어짐으로써, 中世 後期韓·中間 知識疏通의 새로운

<sup>①</sup> 赵煜宗《答洪湛轩书》，藤塚邻编《燕杭诗牍》，美国哈佛大学燕京图书馆藏。

<sup>②</sup> 洪大容《与秋庵书》，《湛轩书外集》卷一，《韩国文集丛刊》第 248 册，韩国民族文化促进会，2000 年，第 114 页。

<sup>③</sup> 洪大容《湛轩燕记》，林基中主编《燕行录》第 49 册，韩国东国大学校出版社，2001 年，第 100 页。

<sup>④</sup> 洪大容《与孙蓉洲书》，《杭传尺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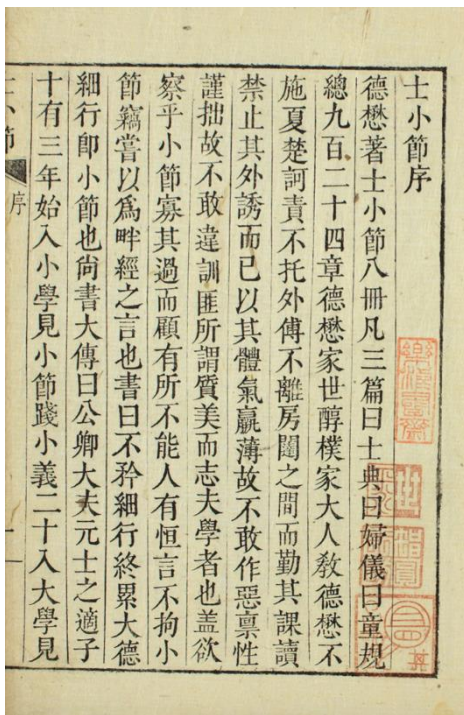
<sup>⑤</sup> 洪大容《湛轩燕记》，《燕行录》第 42 册，第 350 页。

轉機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①</sup>

## 二、《日下題襟集》與中韓學人的尺牘交流

洪大容的書信、文集見證了清中葉朝鮮學者與中國學者的交往關係，而清代學者朱文藻所編《日下題襟集》則記錄了中國文人与朝鮮文人的書信往來。《日下題襟集》現存七種抄本，其中北京大學圖書館藏本有羅以智跋：“鄉先輩

嚴鐵橋、陸筱飲、潘秋屢三先生與朝鮮使臣贈答詩篇及尺牘，兼繪小像，凡六人。朱朗齋先生文藻從嚴先生所編，錄之。……然而善則相勸，過則相規，輔身心性命之學，最窮達出處之志，蓋闕如也。觀夫三先生則不然，往來酬酢，浮英華湛道德。觀摩者學問，引重者志行。欣慕之不已，益加以愛敬；愛敬之不已，益加以砥礪。吁友道之正視，古人其無忝也欤！向使東國使臣，徒遇風雅之才，彼不將坐井觀天，夜郎自大哉！幸而得三先生之人品，足以奮攝之。且見我中華衣冠文物之盛，比比皆然，洵非小邦之人所可以魚頰而鳥瞰者也。”羅以智與



朱文藻、嚴誠均為浙江人，跋文稱贊了朝鮮和清人的交往之風。<sup>②</sup>

一直以來，朝鮮半島一直將中華文化視為正統，不斷輸入漢文典籍。但 1592 年的“壬辰倭亂”和 1636 年“丁卯丙子胡亂”等亂爭導致朝鮮王朝的許多典籍文獻毀於兵燹。金傑在《海東文獻總錄序》中談及：“其在本朝戊午、甲子、己卯、乙巳之禍，尤其慘然者也。是何天之生？若是其盛且多，而畢竟降禍；若是其酷且甚耶？”<sup>③</sup>因而此後派往北京的朝鮮使團都會採購大量書籍，隨團而來的文人也對中華典籍求之若渴，他們或是流連京城書肆、尋覓典籍，如申錫愚 1861 年在北京期間搜尋錢謙益的《初學集》，“錢牧齋《初學集》其門人瞿式耜之筆，愛其筆甚於愛其文，故入都之日求之坊間，則坊人以有注詩集應之，竟未得

<sup>①</sup> 金東旭《18 世紀韓中知識交流研究以洪大容的〈杭傳尺牘〉〈乾淨衛筆談〉為主》，《泮橋語文研究》第 26 輯，泮橋語文學會，2009 年，第 275 頁。

<sup>②</sup> 劉婧《十八世紀中韓文人交流詩文集〈日下題襟合集〉與〈日下題襟集〉的傳抄本》，南通大學主編《中國學術文學與朝鮮漢文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2016 年，第 417 頁。

<sup>③</sup> 金傑《海東文獻總錄序》，서울學文閣，1969 年，第 1 頁。

来，深以为恨。”<sup>①</sup>因为朝鲜文士在北京期间行程紧迫，不能一直留连于书肆，所以他们主要还是向清文人求书。如李尚迪归国后，清文士不断为其寄去金石典籍：“承索《经籍纂诂》《多能鄙事》二书，业已购得，缘公车友人不能多挈篋衍，祇可随后续寄。”<sup>②</sup>又如“彝斋先生所索隶刻五种中，惟《浣池》《析里》二碑一时颇不易得，已嘱西安人觅之，俟汇齐后即当寄上，希先致意。”<sup>③</sup>

汪喜孙与朝鲜学者金正喜的书信曾言：“吾辈文字之知，若以不见面而遂疏，不在京而有间，非古讷也。执事思之吾辈，生已五十有四，所居二千里外，相知有素，相见无期，若并此诗文，不能得之于知己，一不在京，遂不通问，岂非刘孝标之所慨邪？然通问则有时，以所居之位，所处之境，一时不便，而转托厂肆书贾，求书寄书，亦天朝文教，横被四海之盛治，吾未见其不可也。”<sup>④</sup>同时，在清人心中也对朝鲜学术产生了好奇，王鸿就向李尚迪表露期望阅读朝鲜文集，“尊国经学诗教代不乏人，如有专集之书（或选汇之书，亦妙），希寄我是荷。”<sup>⑤</sup>

此外，因清代朴学盛行，文人热衷于金石考据，所以对朝鲜保存的古代碑刻也充满兴趣，经常请朝鲜文士代觅金石拓本，以便进行域外金石研究。如潘祖荫好金石文字，当他得知李尚迪是开创朝鲜金石学的金正喜的学生时，即写信请其为自己撰写《海东金石录》广为物色：“荫近辑《海东金石录》尚未成书，如有以教之，幸甚幸甚”“拙著《海东金石录》，因所见眇浅，尚未成书，所望一瓠之赠，盼切盼切。”<sup>⑥</sup>张穆、韩韵海、吕佺孙、刘喜海等人也在信中请李尚迪广觅朝鲜金石拓本，李尚迪为他们提供了很多金石拓本，促进了清代金石学的发展。<sup>⑦</sup>

### 三、清中叶书籍文化对朝鲜的影响及意义

朝鲜和清朝文士之间的交流以18世纪朝鲜的北学派，即燕岩（朴趾源）群体为中心，和以前两国文士之间进行交流的学术旨向大为不同，开始向内实化和连续化的方向发展，并且有不断加深的趋势。<sup>⑧</sup>如当时洪大容、李德懋、柳得恭、朴齐家和清人潘庭筠、李调元等

<sup>①</sup> 申锡愚《海藏集》，首尔大学图书馆藏，1939年。

<sup>②</sup> 《兰言汇钞·仪克中尺牍》，韩国精深文化院藏本。

<sup>③</sup> 《兰言汇钞·吕佺孙尺牍》，韩国精深文化院藏本。

<sup>④</sup> 汪喜孙《与朝鲜金正喜书（四）》，《汪喜孙著作集》，台湾中央研究院中国文哲研究所，2003年，207页。

<sup>⑤</sup> 《兰言汇钞·王鸿尺牍》，韩国精深文化院藏本。

<sup>⑥</sup> 《兰言汇钞·潘祖荫尺牍》，韩国精深文化院藏本。

<sup>⑦</sup> 권정원《尺牍을 통한 清代学人과의 学术交流》，동양한문학회연구，2011年32期。

<sup>⑧</sup> 金荣镇《19世纪朝、清文士之间的书籍受赠及对出版文化的影响》，南通大学主编《中国学术文学与朝

人之间的书籍赠送：潘庭筠赠洪大容《汉隶字源》；陆飞赠洪大容（金在行）《筱飲斋稿》；李鼎元赠李书九和柳得恭的《牡丹亭记》；陈鱣赠朴齐家《论语古训》；金正喜赠刘喜海、翁树昆《高丽史》；翁树昆赠洪显周《铜尺考》；翁方纲赠金正喜《苏斋笔记》抄录本等。所赠书籍以金石拓本和诗文集为主。

明中期之后因商业出版的普及，小说等新兴文艺作品、个人的诗文集、选集等出版已成为主流。这种情况一直延续到清代，这些出版的书籍大量流入朝鲜并对朝鲜有着巨大的影响。作者生前刊行诗文集早已成为普遍现象，而朝鲜使节和中国文人进行交流的过程中不断要求赠送对方的诗文集。生前不刊行自著诗文集的惯例可以说是朝鲜和中国出版的最大差别。但是使臣在和与中国文士的交流过程中，不断目睹他们诗文集的刊行，朝鲜文人对于自己诗文集刊行的渴望也不断生长。壬辰倭乱后，朝鲜和清人之间的交流开始扩大，如《朝鲜古诗》《朝鲜诗选》以及《列朝诗集》《明诗综》等有关著作的交流不断深化，1778年朴齐家、李德懋燕行时向中国友人赠送了《清脾录》《二十一都怀古诗》等著作，因此他们的文学和学术也被清代学者广为熟知。与此同时，中国也刊行了许多朝鲜诗文集，如朴齐家的《贞蕤稿略》收录于《楚亭全书》中，前有陈鱣的序文：“朝鲜古称君子之国，检书皇华载命。周爰谘諏，不愧九能之目。将见斯编一出，流布风行，脍炙人口。”<sup>①</sup>该书收录朴齐家写给中国学者的诗作多篇，主要涉及彭元瑞、纪昀、翁方纲、吴省兰、李调元、李鼎元、孙星衍、洪亮吉、伊秉绶、吴廷燮、钱东壁等人。此外，中国还刊行了申在植《相看编》、李尚迪《恩诵堂集》、李复铉《石见楼诗抄》、李彦瑱《松穆馆集》等，而朝鲜也刊刻了中国文人的文集，如光绪八年（1882）刊刻沈桂《种桐书屋诗集》、光绪九年（1883）刊清人游智开《藏园诗抄》等，游智开在1872年前后曾任职于永平府，此处是朝鲜燕行使的必经之地，在此期间他与朝鲜使臣姜蘭馨、李裕元、朴周阳、卞元圭、闵种默等人建立了交流关系。在1875年作为陈奏兼奏请使正使的李裕元见到游智开之后，曾收到了其诗集《天愚生诗抄》。卞元圭也收到了这本诗集，并于1883年在朝鲜刊行。

洪大容与清代文人的交往一方面加深了两国在文化、学术方面的交流，更为重要的是，通过书信，他把朝鲜朝大量的学术研究精华以及自己的研究成果不遗余力地向清朝友人介绍，这在他与清文人交流以前的中韩文人交流史中是没有的，其开创之力，功不可没。如居京期间，洪大容撰写了《东国记略》，使清人了解朝鲜的文化与风俗，归国后，洪大容还托人给严诚等人带去朝鲜书籍，如《圣学辑要》。《与铁桥书》：“东谷先生李珥，东方大儒也。论学

---

鲜汉文学国际学术会议论文集》，2016年，第57页。

<sup>①</sup> 朴齐家《贞蕤稿略》，中华书局，1985年，第1页。

论理，具多可观。有文集二十三本，以多秩不可远寄。其中《圣学辑要》一书，編集既简严不苟，附说又切实恳到。不惟为人君之龟鉴。韦布之学，亦不外是。兹以家藏旧本，仍便呈去，望力暗平心熟看，深体而力行之。”另一方面，通过书信及书籍的往还，两国文人还深入探讨学术问题，如洪大容与邓汶轩探讨刻书木板、土板之别，《与邓汶轩书》：“古人书字以刀，载字以竹，至今犹有青史之语。青者，竹之色也，故文字简而理真。自秦人蒙恬作笔，汉人蔡伦造纸，记字易而文字稍繁，然犹手书笔抄，抄一字只得一字也。迨五代，冯道制以雕字，枣梨木板，一印万张，人免手书之劳，世少笔记之学，书籍渐多，汗牛充栋，而好奇之士剽窃只字片语。板刻印书，逢人购售，甚至稗官外史闻谣外语，无不刊出。浮词愈多，正经反掩，始则糠多米少，久恐有糠而绝米，岂非木板作之俑哉？愚尝谓冯道不惟无臣道，又实万世文字之罪人也。”<sup>①</sup>五代以前，尚未出现雕版，书籍常以抄本传世。冯道（882—954）刊刻了大量儒学经典，促进了儒学的发展，雕版普及的同时也出现了大量粗制滥造的书籍，洪大容据此认为冯道“实万世文字之罪人也”。

## 结 论

围绕洪大容与中国学者的交游，不难看出十八世纪中叶中韩学术的发展情况，一方面，中韩学者通过书籍、书信、笔谈等方式相互了解彼此文化与学术传承，切磋学问的同时也加深了两国学者的友谊；另一方面，作为东亚学术交流圈的汉籍在东亚各国的流动，产生了大量批本、抄本，学者间或校勘文本、或撰写题跋、或钤印签章，通过流动的文本，不断积累，并赋予批本、抄本新的内涵，构筑成东亚书史的重要组成部分。<sup>②</sup>

---

<sup>①</sup> 洪大容《与邓汶轩书》，《湛轩书外集》卷一，《韩国文集丛刊》第248册，韩国民族文化促进会，2000年，第128页。

<sup>②</sup> 徐雁平、杨芙蓉《清代的抄书与书籍生产及流动》，《古典文献研究》第二十辑下，凤凰出版社，2017年，第40页。



## 第二轮：美韩同盟体系与中韩关系

主持：白池云（首尔大统一和平研究院）

1970年代上半期朝韩关系缓和的历史考察

梁志（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冷战时期美国在韩核部署与朝半岛安全

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冷战时期美国的对韩经济、军事援助政策的特征

朴泰均（首尔大学国际大学院）

作为等级制度的美日韩安保三角关系

金圣哲（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 1970年代上半期朝韩关系缓和的背景、进程与影响

梁志

(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1970年代初，朝鲜与韩国首次展开具有实质意义的长时间对话。此次对话清晰地昭示出东西方关系改善对朝鲜半岛内部和解推动作用的有限性。换言之，外部大国关系的非意识形态化进程确实在某种程度上促使朝韩双方走上协商之路，但朝鲜半岛的冷战结构并未因此自动消解，主要阻力恰恰来自美苏对抗引发的关乎当地政权存续的南北方体制之争。从这个角度讲，细致梳理1970年代初朝韩对话的历史脉络有助于加深对后冷战时代作为“冷战活化石”的朝鲜半岛内外部关系的认识。

1970年代初朝韩关系改善的大背景是东西方关系的明显缓和，朝鲜半岛局势的持续紧张与朝韩实力的逐渐接近。

1971年8月6日，金日成在讲话中首次表示：“我们愿意在任何时候同南朝鲜所有政党、社会团体和个人进行接触，其中包括民主共和党。”<sup>12</sup>日，韩国红十字会建议10月底前与朝鲜红十字会讨论搜寻离散家属问题。接到韩国的建议后，朝鲜红十字会立即响应，催促9月份就举行会谈，希望同时讨论离散家属通邮、自由来往和互访等相关事项。<sup>15</sup>日，朴正熙在讲话中表示支持韩国红十字会的提议。于是，朝鲜战争结束后几乎从未坐到一起对等交流的南北方，<sup>①</sup>此时终于可以再次聚首，讨论共同关心的话题。

1971年8月20日，南北方红十字会代表在板门店进行初步接触，主要任务是就预备性会谈的相关事宜进行协商。<sup>19</sup>9月20日，南北方红十字会预备性会谈开始，重点是确定正式会议的程序。<sup>11</sup>月20日，第九次预备性会议召开，北方询问南方是否愿意在红十字会会议之外由南北方领导人委任的代表举行秘密会谈，南方做出了积极的反应。<sup>1972</sup>年3月7日，代表韩国中央情报部部长李厚洛的郑洪镇（Jung Hongjin）和代表朝鲜党中央组织指导部部长金英柱（Kim Yeongju）（金日成的兄弟）的金德贤（Kim Deokhyun）终于坐在一起，着手筹备高层秘密互访。

5月2日到5日，李厚洛秘密访问平壤。<sup>5</sup>月29日到6月1日，朝鲜第二副首相朴成哲秘密访问汉城。<sup>7</sup>月4日上午10点，朝鲜与韩国同时公布《南北联合公报》。公报肯定了金日成提出的统一三原则，宣布将在平壤同汉城之间设置常设的直通电话线路，并成立推动南北和解的协调委员会。单就联合公报本身而言，确实表明南北方近一年的对话取得了丰硕的成果。但仔细观察朝鲜特别是韩国对此事的评价，则不难发现双方在文本上的承诺与实际政策设想之间存在着极大的差距，未来的协商之路不容乐观。

<sup>①</sup> 此间，除军事停战委员会会议外，双方的对话仅限于1963年依据国际奥委会的建议两国体育官员在瑞士举行的会谈。

从8月30日开始，朝鲜和韩国红十字会在平壤和汉城轮流召开正式会议。但会谈很快陷入僵局，主要分歧在于：南方代表强调统一的循序渐进，突出会谈的人道主义性质，认为人道主义问题的解决会为和平统一铺平道路；北方代表强调忽视国家的问题就不能体现人道主义，突出会谈的政治性，认为最高层次的人道主义便是祖国统一。南方应该首先废除《反共法》和《国家安全法》，为搜寻离散家属扫清障碍。直到1973年7月11日第七次正式会议，双方依然无法就作为第一项议程的调查离散家属成员住址和生死问题达成协议。在此前后，南北协调委员会也举行了数轮讨论，同样没有达成具有重大意义的协议。

1973年6月以后韩朝双方正式进入一场你来我往的心理宣传战。8月8日，韩国新民党领导人金大中在日本被绑架，险些丧命，很多人猜测韩国中央情报部牵涉其中。28日，金英柱就此事发表声明，要求将李厚洛开除出南北协调委员会，并允许“南北朝鲜的各政党、社会团体和各阶层人民的代表”加入其中，否则将终止南北对话。次日，李厚洛表示韩国中央情报部并未卷入绑架金大中的事件，希望朝鲜收回声明。此后，虽然南北方红十字会会谈和协调委员会会议仍断断续续地召开，但均已明显降级，且几乎未达成任何一致意见，甚至时常沦为相互攻击的渠道。这一切昭示出，南北对话走向停滞。与此同时，军事冲突再次成为南北方的特殊共存状态，主要表现为1973年10月以后的黄海五岛冲突和1976年8月18日的板门店危机。

那么，既然朝鲜和韩国都有意缓和紧张局势，为何1970年代初的南北对话没有成为朝鲜半岛走向统一的关键一步呢？首先，双方设置了完全相悖的目标。北方在与南方对话的过程中始终强调政治和军事缓和的重要性，主张没有外力干预下的自主统一，以便推动驻韩美军撤离。而韩国的政策预期则恰好与之相反。它一边“从实力出发”与朝鲜对话，为美军继续驻留韩国寻找理由，尽可能避免战争的爆发；一边加速军队现代化的进程，秘密研发导弹和核武器。其次，不同程度地受到国内因素的掣肘。虽然金日成在国内的威望极高，但这并不意味着他的政策主张能够得到所有人的拥护。军方对南北对话的反对束缚着金日成的手脚。与此同时，在南北对话的过程中，北方代表时刻不忘宣传金日成的“主体”思想，一些南方的媒体逐渐熟悉并接受了这一理论。这对朴正熙政府来说，无疑是一个危险的信号。韩国的应对策略是一面干脆将“主体”一词直接移植过来，根据1972年11月的《维新宪法》设立了国家最高权力机关“统一主体国民会议”(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and Chuch'e)；一面不断加强政府对舆论的控制，宣传“共产党威胁”，放缓南北对话的步伐。再次，追求对外关系利益最大化的负面效应。在缓和与对方关系的同时，朝鲜也在追求改善同日本特别美国的关系，同样韩国也希望同中苏两国建立联系。但另一方面，朝鲜和韩国却又在极力阻止盟国与对方和解。

1970年代初的朝韩对话虽未能成为统一道路上的里程碑，但却在很大程度上改变了两国内政外交的基本态势。其一，潜移默化地塑造着韩国的国内政治形态，以追求国家安全为目标的南北对话给政权安全带来的威胁曾一度成为促使韩国政府加强独裁统治的主要动因之一。其二，大大改善了朝鲜的国际处境。

作者简介：梁志，男，吉林长春人，华东师范大学历史学系/周边国家研究院教授，博士生导师，历史学博士（上海 200241）

## 美国在韩国的核部署与朝鲜半岛的安全

陈 波

(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2017年,当“萨德”部署问题再次成为朝鲜半岛乃至西太平洋地区的重要国际政治话题时,“核武器重返韩国”的呼声也日益高涨起来,韩国和美国的鹰派分子叫嚣重新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战术核武器又被称作作战地(battlefield 或 theater)核武器。毫无疑问的是,“重返”一定会使本已积重难返的朝核危机更加难以解决,同时加剧地区安全困境,被中国和俄国来看作是安全威胁。同时,“重返”意味着美国在历史上曾经在韩国部署过核武器。面对朝鲜核危机不断升级,我们不禁要问这段历史究竟如何?是否对当前朝鲜半岛的困难局面产生了影响?

根据学者们的研究成果,我们知道美国在韩部署核武器长达33年,从1958年一直到1991年。美国在韩国的核武库于1967年达到峰值,共计950枚,而种类最多时达8种。冷战时期,美国在韩国的核武器主要部署在埃姆斯军营、群山空军基地和乌山空军基地。上世纪80年代部署的数量逐步减少,一度下降到200—300枚。到冷战结束的1990年时,美国在朝鲜半岛的核武器只有100左右枚。核武撤出后,对于日本、韩国的核保护,美国主要是以核武装的战略空

军、潜艇和航母来提供的。

艾森豪威尔政府在韩国部署核武器的决策史昭示出冷战时期美国政府高层核决策的复杂性。核决策不仅涉及在危机事件中是否使用核武器，还包括在海外部署核装备的决策过程。该过程体现了核武器作为一种遏制手段，其部署如同使用一样，在决策过程中存在军事和政治两个方面的争议。这些争议往往是华盛顿使用或部署核武器存在“禁忌”的主要顾虑。在韩核部署的决策过程——如同朝鲜战争、台湾海峡危机中的核决策一样，反映出美国向海外部署核武器存在着“威慑”与“禁忌”的两重性。华盛顿一方面希望通过核部署来真正实现核武器的“威慑”作用，而另一方面又不得不应付决策高层的内部分歧、西方盟友的反对以及某些“小伙伴”的自利行为。

值得注意的是，李承晚政权在美国核部署决策中扮演了重要角色。在决定部署之前，韩国政府可能借核武器武力北进是杜勒斯的顾虑之一，而在决策过程中，华盛顿不得不将李承晚强烈抵制韩军裁减的行为考虑在内，最终决定以“现代化”换取其同意裁军。在核部署之后，美国对韩国政府的军事动向更加敏感，控制也日趋严格，以避免陷入与中苏之间的核大战。美国在韩国部署核武器，在某种程度上使朝鲜半岛的冷战格局进一步固定化。

对于整个冷战时期美国在韩核武器的部署情况，目前只有国防部 1999 年部分解密的文件可以参考。1958 年 1 月，美国最初部署了大概 4-5 种制式的核装置，150 枚弹头。是年 3 月，核炸弹和轰炸机载炸弹被国防部部署到韩国。1961 年 1 月，美军部署了“奈基-大力神”防空导弹。其中，在韩国部署时间最长的就是 8 英寸火炮，一直贯穿了整个 33 年的历史时期。应该说，由于射程的原因，在韩国的核部署的威慑作用是地区性的。这些武器最大射程 1,000 公

里，覆盖中国的北京和上海、苏联的海参崴。除了韩国陆地部署的核武器之外，美军战略核力量也扮演了重要角色。上世纪 70 和 80 年代，美国海军的战略导弹核潜艇偶尔会停靠韩国军港，其中 1979—1980 两年间就靠港 10 多次。核潜艇上一般都载有 16 枚导弹 48 枚核弹头。限于档案未解密，这些靠港行为原因不详，但与美国裁减非战略核力量部署基本一致，也可能与韩国当时的政治变动有关。

按照美国解密档案所示，核武器应是在 1991 年撤出朝鲜半岛。但实际上，这一进程一直延续到 1998 年。起初，撤出核武器的决定是与乔治·布什总统在 1991 年发起的单方面裁军动议相一致的，即将战术核武器从北约六个国家以外的国家或地区撤回。尽管做出了这一决定，但美国军方并没有立即执行。根据太平洋司令部史披露，最终完全撤出是在 1998 年。该文件还透露，布什总统根据 1991 年 11 月 5 日以国家安全指令第 64 号文件 NSD-64 批准了 1991 年和 1992 财年的核部署授权（Nuclear Weapons Deployment Authorization，NWDA），决定逐步将海外陆基和海基战术核武器撤回美国本土。该文件要求在韩国的核部署具体在 11 月 20—22 日的韩美军事和安全委员会联席会议上商议。在韩国，最先撤出的是 60 枚核炸弹，B61 型战术核弹是随后撤出的。1998 年 12 月 18 日，卢泰愚宣布“我现在声明，在韩国任何地方没有任何核武器”。当被问及如何回应卢泰愚的声明，布什总统说“已经听说，我不打算否认这一点”。这应被看作是美国撤出了所有核武器。





# 韩美关系史的回顾与展望

朴泰均

(首尔大学国际大学院)

一直以来，韩美关系的研究主要强调军事和安保两个方面。考虑到半岛在地缘政治上的特殊位置，这也是理所当然的事。这一特性在韩美军事政府的设立、韩战的爆发、韩美共同防御条约的签订（1953）、韩美合意议事录签订（1954）以及之后停战体系的维持与驻韩美军的驻扎等事项中得到了充分的体现。美国的对韩军事援助与军售分别持续到上世纪70年代初与70年代中期以后也展现了美韩关系中军事安保领域的重要性。

韩美关系相关研究从上世纪90年代开始强调经济层面。韩国自加入OECD和WTO后开始持续强调对美贸易关系的重要性，2000年以后随着韩美FTA的签订，韩美关系中经济层面所受到的重视开始不亚于军事安保。然而值得注意的是，韩美之间的军事安保关系实际上从出发开始就与经济层面的问题有着紧密的联系。

美国于1945年开始在韩驻军，并设立军事政府。1947年，有关驻韩美军撤军的讨论开始出现，1949年美国的财政负担则成了讨论中的重要议题。到了50年代驻军缩减问题与汇率问题则成了韩美之间最为重要的议题，这可以在同一层面上理解。进入60年代，美国计划将对韩援助转移至日本，以此推动了韩日邦交正常化（1965）。美国于肯尼迪政府开始对韩进行经济开发援助也是着眼长期为韩国打造一个坚实的经济基础，以达到削减对韩支出的目的。

70年代尼克松政府的登场更是将这一政策推入了快车道。尼克松政府在提出“尼克松主义”后随即开始考虑从越南和韩国全面撤军。假如“水门事件”没有爆发的话，美驻韩地面部队或已全部撤出。美国在70年代试图将韩军将领任命为军事停战委员会联合国军一方首席委员这一点便充分反映了美国的这一政策倾向。美国从福特政府开始着手制定驻韩美军撤离的相关政策，具体议案则于卡特政府时期立项。为了推动这一政策，尼克松与卡特政府开始着手缓解半岛内的紧张局面，并推动各大国交叉承认朝韩两国。卡特政府还计划以三方会谈的形式来解决撤军之后的问题。

这时，贸易问题开始上升为美国对韩政策核心中的一环。韩国在高速发展经济的同时不断扩大对美出口，尼克松政府则试图通过棉织品配额制度来管制韩国的出口，到了70年代中期以后韩美两国开始就对美输出商品的关税问题进行持续的协商。70年代后期，美国开始强烈批判韩国的保护贸易主义，并开始密切关注韩国政府对电子产品业的扶持政策。时至80年代初中期，韩美间的主要议题则成了知识产权相关问题。

美国从90年代开始推行“全球态势评估（GPR）”，自此驻韩美军的大规模削减，其向快速反应部队的转型，还有韩军的作战指挥权交还等成了热点议题。这一趋势反映了后冷战时代美国在从安保出发重新评估海外驻军必要性的同时也增加了对经济、财政方面的考虑。如今特朗普政府的政策也可在这一延伸线上理解。

在了解韩美关系的发展历程后便可观察出一个有趣的事实，即在艾森豪威尔、尼克松与特朗普等共和党执政时期，驻韩美军问题都被看做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在解释这一现象时需结合对共和党财政政策，及其与军事安保问题之关联性的理解。在施行凯恩斯式财政政策的民主党政府时期，除了卡特政府时期外驻韩美军问题并没有上升为一个很敏感的话题。在观察特朗普政府政策时，很有可能产生一种与尼克松时期似曾相识的感觉。

综上所述，研究韩美关系时如能结合对军事安保与经济财政方面的考虑则能更加全方位、客观地理解两国之间的关系。

## 作为等级制度的美日韩安保三角关系

金 圣 哲

( 首尔大学 统一和平研究院 )

来自中国的老师们提出了有关美韩同盟的问题。本发表虽不针对特定提问，但笔者会以本人最近的研究为基础来为各位说明美韩同盟，希望能有祝各位理解。

笔者认为，只有着眼冷战时代形成的美日韩等级关系才能正确理解美韩同盟。二战终结后，美国于 1951 年 9 月与日本签订旧金山和约后紧接着又签订了美日安保条约。朝鲜战争结束之后，美韩两国于 1953 年 10 月签订美韩共同防御条约。至此，东亚—太平洋地区诞生了两个以美国为核心的重要同盟关系。美国并没有就此停下，而是积极介入 1960 年代前期的韩日会谈并从中斡旋，从而使美日韩安保三角关系制度化。当然，韩日会谈并没有涉及安保协议，但美国十分看重费用分担的问题——即日本提供对韩援助的问题。然而，这个安保三角关系包含了两个同盟关系（美日、美韩）和一个伙伴关系（韩日），这样一个混合型的关系内部难免存在纠纷和不和。

有关同盟的分析可分为对同盟关系形成的外部因素的分析以及涉及关系维系的内部因素的分析。换言之，同盟研究既关乎同盟关系经由权力平衡或威胁平衡而形成的过程，也关乎同盟内部的政治（intra-alliance politics），关于北约和华约组织内部的紧张、分裂与权力分配的分析便是很好的例子。对同盟内部政治的研究揭示了一点，即同盟关系并不依靠共同的外部威胁或危机意识来维系。除去外部的威胁，美日韩三角关系的内部政治也十分重要。应当注意的是，在应对共同外部威胁时，三个国家对自身利益、他国的期待都各不相同。

同盟内部政治中最为重要的莫过于费用分担（burden sharing）和承诺（commitment），这其中涉及到谁须为共同防御作出何种保证，谁该承担多少费用以及为何该如此分配的问题。美日韩安保三角关系同样如此。费用分担与承诺是团结巩固同盟（在此为美日韩关系）的要素，两者紧密相关。同盟的维系基于对安保的承诺，而承诺中必不可缺的便是费用分担。但是，盟国之间也有逃避承担费用的问题。为了落实费用的分担，各盟国需作出共同的承诺，抑或是一致认为为了共同防御应遵守某大国所作出的承诺。所谓费用分担是指为了共同防御所作出的经济、军事上的贡献，这可以是为弱小盟国提供经济援助，为维持本国军队所支出一定的预算，或是直接采取防御行为

应对外部威胁时所产生的费用等。

由于美日韩三角关系呈等级状，因此围绕费用分担与承诺的三边关系是一种不对称的、不平等的关系。三者之间不仅有等级的差别，对于背弃（abandonment）与受连累（entrapment）的担忧也互不相同。美国担心因半岛武装冲突受牵连，日本则从根本上回避与韩日安保有关的承诺，而韩国则担心美国和日本在军事上、经济援助上的背弃。

作为在东亚-太平洋地区遏制苏联的战略一环，美国依靠强大的国力引领着两个盟国并主导、维系了安保三角关系。美国通过条约和共同宣言落实了对日本与韩国的防御承诺，并以驻韩美军和作为后勤基地的驻日美军战力应对来自苏联和朝鲜的威胁。同时，美国还为韩日设定了接触共产国家的红线，以此管制两国的相关政策与行动。此外，美国还积极介入并试图解决日韩之间的纠纷。因为日韩之间的冲突对于安保三角关系是个损失，也违背了美国的利益。

不仅美日韩安保三角关系如此，日本在更广阔的范围内——特别是在西太平洋区域内是美国最核心的盟国。战后的日本之所以能从敌国摇身一变为盟友与其战略价值息息相关。即便战败，日本仍在官僚体系、技术和经济等领域拥有十足潜力。日本通过在朝鲜战争期间充当后勤基地迎来了经济复苏的机会，而1964年东京奥运会的召开更是昭示了日本于60年代进入了经济繁荣期。日本根据美国的对苏封锁战略向全球各战略要地提供了援助，日本的对韩援助也是这其中的一环。1965年韩日邦交正常化后，日本的对韩援助规模逐步上升而美国的对韩援助逐步减少。

如上所述，安保三角关系中费用分担和承诺有着密切的关系。美国要求日本提供对韩援助，并就日本的安保与韩国乃至东亚的安保密不可分这一点达成了一致（主要通过美日共同声明）。韩国更是要求美国向日本明确提出这一点。在要求日本分担费用的层面上，韩国和美国的利益是一致的。而日本则坚持对韩援助应局限于经济领域，试图将经济与安保分离开来。到了1980年代，日本主张应将韩国从援助对象国中剔除，因为经济高速发展后的韩国已不是欠发达国家。相反，韩国则认为自身处于对苏战略封锁的最前线，日本为之分担费用是理所当然的。

日韩之间的关系比起一般盟国之间可能出现的利益落差更具争议性，且很难单纯用历史因素来说明。日本不仅参与了美国主导的对韩战略援助，在联合国等国际机构处理韩国问题时也是美国的重要伙伴。而且在对待韩日关系时，日本的处事方式与美国相一致，因此很多情况下都能得到美国的支持。比如，韩日围绕在日朝鲜人归国问题发生对峙时，美国和日本都秉持人道主义精神支持遣送在日朝鲜人返回北朝鲜；在处理独岛纠纷时，时任美国务卿腊斯克（Dean Rusk）还曾维护日本将1905年岛根县官报刊载信

息作为声称独岛领土主权之法律依据的主张。°在韩国的立场上来看，对日提及历史遗留问题不乏追求利益最大化的成分。°例如 1950 年代韩日会谈初期，韩国曾批判日帝国主义的殖民侵略并以此为由要求赔偿，这是为了对日本施压使其做出最大限度的妥协。°对此日本的态度是，赔偿不可能，但可以通过经济合作的方式解决。°实际上，之后的对韩援助都是以“经济合作”的名义进行的。°即便美国一再诘难日本“逃票乘车( free ride )”，但日本始终拒绝提供与韩国安保有关的援助。°

美日韩安保三角关系经过了一系列的演变。°冷战的终结是三角关系变化的结构性因素，而三角关系内部的变化也同等重要。°对于美国和日本，崛起的中国替代苏联成为了新的威胁。°而日本国内的政治动荡，特别是作为保守派制衡力量的社会党的衰败以及历史修正主义的抬头使得美日军事一体化得以加速推进。°韩国经历民主化后成功实现了经济高速增长，并于 1996 年加入 OECD 后从受援助国成为了援助国。°由于费用分担结构上的这一决定性变化，韩日关系间的非对称性和等级关系也没有那么明显了。°美国试图将安保三角关系转变为三角同盟关系，然而这有一定的局限性。°冷战结束后，韩日间的历史纠纷与两国关系非对称性的减弱有着密切的关联。°在两国历史纠纷中，美国作为三角关系中最顶端的力量，一直发挥着介入并调解矛盾的角色，而 2015 年 12 月的韩日慰安妇协议便是美国从中调节的结果。°然而，安保三角关系从 1960 年代中期一直发展到 1980 年代中期后已达到了最高潮，这种关系变得再难以维系。°并且，随着半岛无核化与和平进程的逐步进展，两个单独的同盟关系也将发生相应的变化。°



## 第三轮：首脑峰会之后朝鲜变化的展望

主持：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金正恩时代朝鲜党军关系的变化与先军政治

李相淑（国立外交院）

朝鲜即将步入无核化进程中的中国立场与中美韩关系

刘鸣（上海社会科学院）

半岛统一的理想模式是否存在

金炳鲁（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 金正恩时代朝鲜党军关系的变化与先军政治

李相淑

( 国立外交院 )

## 1. 绪论

- 2018 年金正恩委员长为改善南北关系和美朝关系致新年辞。
- 2018 年 4 月，朝鲜发表集中全部力量发展经济的“新战略路线”。
- 比起发展经济，并进路线更注重核武的开发。考虑到这点，金正恩时代的执政理念将仍是先军政治。
- 然而，朝鲜宣布“已完成国家核武装”，在此情况下如果国家资源的分配集中到经济开发上的话，朝鲜的先军政治路线是否存续还值得商榷。
- 为了更好分析先军政治的变化，笔者认为应着眼朝鲜国家机构系统的变化。
- 本文将国防委员会为中心探讨和比较分析金正日、金正恩时代的党军关系。

## 2. 中国的党军关系理论

- 戴尔·赫斯普林 ( Dale Herspring ) 提出了一种涵盖党军关系变化的发展模型，此模型通过分析军部在何种程度上接受党的理念价值来说明党与军部之间的矛盾。换言之，军部接受党理念价值的程度越高，党控制军部的必要性便会相应地降低。
- 艾丽斯·约菲 ( Ellis Joffe ) 认为应从党控制军队 ( party control )，共生 ( symbiosis ) 与职业化 ( professionalism ) 三个分析角度分别来看待中国的党军关系。

## 3. 金正日时代的党军关系

- 根据朝鲜文献的解释，先军政治的实现并不是靠“将国家机构整体军事体制化”，而是通过“在现有国家体制中优先考虑军事，将军事领域的地位与角色提升到最高位置”来达成。
- 金正日时代的先军政治通过强化国防委员会的地位得以实现。在这一时期，国防委员长作为国家最高领导人不仅掌管国防委员会乃至国家的整体事务，还拥有任免包括国防委员在内的军队要职、宣布战时状态与军事动员令的权利，更手握宣布国家紧急状态的大权。

- 根据约菲的理论，金正日时代的党军关系可看作是“共生”关系。社会主义阵营的崩溃与极度的经济困难成了威胁体制生存的非常状况，在这一认识下以军队为中心的国家统治机构—国防委员会诞生。

#### 4. 金正恩时代的党军关系

- 与金正日时代不同的是，金正恩第一书记恢复了党组织的正常职能。第7届党代会后，军队在党内的地位下降得以体现出来。以前身居政治局常务委员的总政治局长如今只被选任政治局委员，而一度身居党中央军事委员会副委员长的总参谋长也被降低到委员的位置。
- 党职能的正常化与以国防委员会为中心的国家治理系统不相匹配，于是金正恩制定了一个新的系统。2016年6月29日，朝鲜依据社会主义宪法设立国务委员会，并新增国务委员长一职。
- 国防委员会的任务与权限是制定国家主要政策以贯彻“先军革命路线”，与其相比国务委员会则将其任务与权限明确规定为议定国防建设事业等重要国策。
  - 国务委员会删除了“先军革命路线”，不强调先军政治。从这一点看，国务委员会和国防委员会有明显区别。
  - 金正恩时代，党对军队控制的必要性增高。为了有效控制权力结构中过于强大的军队，金正恩恢复了党的正常功能。按照约菲的理论，这一过程中朝鲜党与军队的关系转变为“党的控制”。

#### 5. 结论

- 金正恩时代先军政治的弱化在经济领域的体现尤为明显。2018年4月，朝鲜宣布集中全部力量发展经济的“新战略路线”时明确指出执行的主体是“党和国家”，把军队排除在外。在金正日时代先军政治的指导下，国防和经济领域都执行军队优先的政策，因此军队在经济建设中也是核心势力，而到了金正恩时代军队在经济建设中的角色明显缩小。
- 国务委员会的成立展现了金正恩政府脱离军队转向以党治军治国的特性。根据约菲的理论，金正恩时代党和军队的关系已转变成“党控制军队”的关系。
- 可以说，近来金正恩委员长改善对外关系的努力与新战略路线的宣布是以国务委员会为中心的国家系统内党军关系的变化与先军政治褪色的结果。

## 朝鲜即将步入无核化进程中的中国立场与中美韩关系

刘 鸣

(上海社会科学院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

在这几年朝鲜半岛紧张局势升级，无核化进程陷入僵局的情况下，中国始终坚持自己的原则，按照是非曲直判断来确定对朝政策。首先，中国坚决反对朝鲜相悖于时代潮流、国际社会文明与规范的要求强行发展核武器；其次，在六方会谈终止后，在应对朝鲜核试验、导弹试验过程中，中国在联合国安理会磋商、制裁决议形成过程中，与美国、俄罗斯等国维持了紧密的沟通合作关系；其三，对履行联合国制裁决议，中国政府始终如一严格执行；其四，中国一再强调，美国应该充分考虑朝鲜的安全关切，以此作为切入点，引导朝鲜走向无核化；其五，针对美朝的互不信任、互不相让，中方基于务实与平衡立场，建议用“双暂停”与“停和机制”转换来引导美朝停止对抗，为谈判解决危机铺平道路。

中国欢迎并支持朝韩双方按照《板门店宣言》所体现的对话、和解与合作精神，落实好北南领导人两次会晤的共识，持续推进和解与合作，不断通过对话协商建立相互信任，改善彼此关系，为延续和巩固半岛缓和势头发挥积极促进作用。特别是欢迎与支持在无核化谈判尚没有突破，《终战宣言》也无法发表的档口，朝韩开始探讨建立军事互信的举措，如尝试撤销非军事区中最前方约 10 个瞭望哨的构想。中国也真诚希望美朝两国能够落实新加坡峰会的《联合声明》，按照分阶段、同步走、一揽子原则推进朝鲜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在每个阶段，所有有关各方都应承担相对应的责任与义务。这样才能保证政治解决朝鲜半岛问题进程的可持续性。

这个无核化三原则的含义是比较笼统的，也是微妙的，需要高超艺术来操作。关键

是美朝缺乏互信，要一步到位去解决问题比较困难，但双方需要有具体步骤。分阶段应该包括两个方面：无核化与美国的安全保障，这需要精到的设计与明晰化。分阶段弃核的策略过去总以失败而告终，从六方会谈的案例看，双方会花很长时间纠缠一些内容讨价还价，增加一些本身并不真正需要或者本身就在题意之中的东西，以交换实际价值非常有限的短期好处。因此，分阶段必须与一揽子原则同时运用。同步走，意味着每一方采取的行动，另一方应该有相应的表示，如朝鲜在无核化方面采取了具体行动，在取消经济制裁方面，美国等国际社会应该有对应的放松举措。一揽子主要是需要有一个统揽性、全面性的安排与路线图及时间表，不能走一步看一步，拖延谈判与履约的时间，不能无正当理由排除应该包含的谈判的内容与履行的关键目标。

美朝谈判不仅仅要解决朝鲜的核项目，同样也要一劳永逸地解决朝鲜对美国安全上的担心。美国必须给朝鲜以可信、不可逆的安全担保，美朝应该关系正常化。美朝互信与朝鲜无核化是互为因果关系，也应该保持动态良性互动，把完全实现无核化作为美国取消所有经济制裁与关系正常化的前提是不合适的。在朝鲜开始采取实质性步骤落实无核化目标过程中，美国等联合国安理会成员应该讨论分阶段放松对朝鲜的经济制裁，以使其感到国际社会的善意与鼓励，促使其更积极与加速弃核进程。

目前，特朗普自视甚高，以为靠其极限施压与金正恩在新加坡亲密的互动就可以搞定朝鲜，所有的无核化的条件、范围、时间都由其单方面决定，也不与中国协商，虽然与韩国有磋商，但显然韩国对其影响有限。随着特朗普政府把应对中国战略、经济与科技挑战视为其最重要的外交议题的背景下，朝核问题在美国外交议程中的地位已经下降，没有紧迫性。对朝鲜来说，来自美国的战略压力已经大大缓解，它完全可以静观其变。所以，美朝无核化谈判没有实质性进展是预料之中的。美国不改变单边主义作风，不采取灵活性的谈判策略，继续同步在中国、俄罗斯、伊朗等问题上点火，制造冲突，朝鲜半岛再次陷入僵局的可能性会越来越大。

针对目前的暂时困难，中韩应该进行更多的协调，分别与朝鲜进行磋商，韩国还应该积极与美国保持沟通，而不能单单以朝韩关系的单向拓进作为突破口。由于文在寅总统急于先改善朝韩关系，恢复开城工业园区计划与金刚山旅游项目，所以，在朝鲜无核化推进目标上有可能将不再大声坚持原则立场，甚至想保持更多的灵活性，以朝韩关系来带动朝美关系发展，最终推动无核化。文在寅总统 8 月 15 日在纪念光复 73 周年暨

韩国政府成立 70 周年庆祝仪式上就表示，“韩朝关系的发展并非朝美关系取得进展的附带效果，相反，韩朝关系的发展才是推动半岛无核化的动力”。韩国政府的这种类似金大中“阳光政策”，必定会加剧美国对韩国的不信任，双方的不协调情况会更多出现，如美国国务院 8 月 19 日就认为设立开城联络事务所违反制裁，驻韩美军（联合国军司令部）也以《停战协定》规定须提前 48 个小时向联合国军申报跨境计划为由，阻止韩国官员跨过军事分界线，朝方对京义线朝方境内的区段进行联合考察。朝鲜也看出美朝的不同步，所以，会设法利用这种矛盾来提高其谈判的地位，影响美对朝政策。

中美作为东北亚最大的两个大国，双方有义务就无核化的推进方式、责任与成本的分担、监督与管理进行协商。如博尔顿提出在一年内拆卸掉所有核武器项目，并运出朝鲜显然不切实际。一方面这需要朝鲜的全面配合，它取决于美国方面的同步性举措，同时取决于朝鲜内部各部门的协调一致。另一方面，博尔顿的想法在技术上无法做到：关闭核设施相对容易，但要安全地拆卸包含高放射性物质的核材料，一年时间远远不够。既然美朝对如何启动无核化进程与建立互信有较大的分歧，中国完全可以作为参与方、协调人提供参考的意见，在美朝之间进行斡旋，协助美朝韩共同制定一个公平、有效、有时间节点的方案，与相关国家共同承担无核化与和平机制建立过程中的义务、成本。

中国作为《停战协定》的签字一方，也是朝韩和平共存的外部支持方、半岛的重要邻邦，理所当然应该参与未来和平机制的构建。中国希望美朝与朝韩能够分别签订《互不侵犯条约》。在此基础上，中美朝韩与联合国秘书长可共同签订《和平条约》。中美应该为朝鲜半岛的永久和平提供政治上的保障，东北亚六个国家也应该共同构建一个地区安全合作机制，使朝鲜半岛与东北亚的安全形成互补性的结构，最终使这个地区摆脱冷战格局。

中韩、中朝、朝韩已经就签署《终战宣言》进行了协商，中国对韩国转向支持中国与朝韩美共同签署《终战宣言》这一立场表示肯定。目前，美国在未看到朝鲜承诺无核化举措之前不会同意签署《终战宣言》，同时，它也反对中国的正式加入。如果未来单单由朝韩美三方签署《终战宣言》，这必将不利于中国参加下一步的和平机制的进程，也将不利于中国在无核化过程中发挥积极的作用。一旦中美的战略竞争被引入朝鲜半岛，将给未来的半岛带来严重的不稳定，因为，中国必将采取反制措施来制衡美国的战略扩张。

即使朝鲜实现无核化与半岛建立了和平机制，中美在朝鲜半岛的战略竞争也不会偃旗息鼓，美国对地区安全热点的考虑始终是随着形势变化而调整，中国是其最大的战略竞争者，所以，美国并不希望中国对朝鲜，乃至韩国进一步扩大经济与政治影响。如果无核化最终实现，美朝关系也实现正常化，美国完全可能开始探索与朝鲜发展经济与军事关系，以在中朝之间打入楔子，防止朝鲜对中国过多的依赖。同时，即使和平机制能够建立，美国仍然计划在韩国维持军事存在，以联合韩国、日本制衡中国的军事力量。

未来的和平机制肯定要涉及到驻韩美军与韩美同盟的问题，因为这与朝鲜的安全关切是有密切的关联。中国对文在寅总统5月2日提出的立场不可能认可，他表示：驻韩美军是涉及韩美同盟关系的问题，与韩朝签署和平协定毫无关联。驻韩美军与韩美同盟是朝鲜战争与《停战协定》的产物，更是东亚冷战的组成部分，长期以来主要是对朝鲜进行军事威慑。但一旦朝鲜的核导威胁消除，美朝实现了关系正常化，朝韩建立了和平共存的合作机制，驻韩美军就会遇到谁是新的威慑对象的问题。美军的战略决定了它不可能进入无敌可惧的状态，它必定会发生转向。所以，韩美同盟即使不废除，驻韩美军不撤离，其性质、规模、功能也应该做出相应的变化。当然，对于美军去留与同盟的存废主要由韩国独立决定，中国尊重朝韩就未来美军地位的决定，唯一要求是美军不能用于威胁、侵略中国，更不能预设可以在台湾海峡有事时介入。驻韩美军不能成为美国构建美韩日军事同盟的组成部分，也不能削弱朝韩的军事互信。中国仅仅希望看到朝鲜半岛的南北部分的力量是平衡的，军事上是互信的，美军的行动必须得到韩国政府的节制。同时，任何具有针对中国的战略性武器部署，如萨德导弹，均应该撤离。

## 从并进转向先经：北韩的新战略路线

金炳鲁

(首尔大学校统一和平研究院)

2018年在韩半岛正在进行中的无核化进程从何开始？新的变化始于北韩开始寻求对话与协商的方式，而使北韩做出这种态度转变的理由是什么？对此，存在四种观点。

首先，制裁与极限施压政策的效果。联合国、美国主导的全面经济制裁与军事威胁使北韩受到经济、外交、心理上的打击，为了缓解制裁与释压，北韩重新坐回协商的谈判桌上。

其次，北韩内部政策变化所带来的结果。拥有核武器的北韩获得自信，以此为筹码进行全面的经济建设协商。北韩于2017年11月30日宣布完成国家核武力，此后会将集中于国防的国力投入经济开发，为建设经济强国铺路。

其三，文在寅政府调解外交的成果。2017年5月文在寅总统执政后，在7月6日柯尔柏基金会上发表了韩半岛和平构想，9月在联合国大会上又提议奥运会休战等有关无核化与和平机制的一系列和平构想。其结果拉动了南北领导人会谈与北美（美朝）领导人会谈。

其四，中国角色论。为北韩供应原油、粮食，掌握着北韩体制生死存亡的决定性资源的中国加入制裁施压北韩的队伍，使北韩作出改变。

以上四种解释皆有可能，也或许是四种原因交叉作用而带来了2018年韩半岛的和平。其中第二种原因，即北韩内部的政策变化是怎样进行的？我们有必要进一步地探讨。

对于北韩而言，2016年5月第七次党代会是一个重要的转折点。自1980年以来，36年久违的党代会有不同寻常的意义。36年以来，党代会的迟迟未开正是因为经济问题。金正日于1984年2月以及之后多次明确强调“首领……进一步提高人民生活水平，再开启党的第七次大会是我们党坚定不移的决心”。从北韩36年间顽固不变地拖延党代会的举办可见，经济发展是北韩最为执着的重要问题。在此背景下，2016年5月第七次党代会的举办意味着金正恩执政后，北韩的经济有所发展，人民生活有所提高，这是党国和人民共同的感受。

金正恩委员长在2012年4月首次公开演说上提到“我们党执着不变的决心是不再让我们人民拉紧裤腰带，让我们人民尽情观赏社会主义富贵电影”。依附经济增长的成果，举办第七次党代会的北韩在6月发布了《国家经济发展五年战略（2016-2020）》。紧接着于7月6日，以政府发言人的名义提出了无核化五大条件，表示如若五大条件实现，北韩将放弃核武器。

五大条件如下：1）公开韩半岛内的美国核武器；2）核武器与基地撤离、验证；3）保证不会使用核打

击；4）承诺不会用核或核相关的战争行为进行威胁恐吓；5）拥有核使用权的美军撤离宣誓。°北韩提出依照其制定的时间表开展对话，然而此时的美国国内正处于热火朝天的大选之中，并未有闲暇作出反应。°北韩受到美国与日本的施压，于2017年7月4日、8月29日、9月3日、11月29日通过ICBM及核试验发出强硬的挑战。°11月30日，宣布完成国家核武力。°

2018年4月20日，在党第七届第三次全员会议上公开阐明2013年提出的经济—核开发并进路线已终结，宣布新的战略路线，将全部国力投入到经济发展。°首先，将国家经济发展五年战略期间现有的工厂及企业逐步“正常化”作为首要目标，预计从2021起全面推动经济开发。°北韩将此称呼为“新战略路线”，强调政策的转变。°所谓新战略路线是指从此“动员国家的人力、物力资源，集中所有力量建设强有力的社会主义经济，极大提高人民生活水平”。°为此，“党和国家的全面事业在于社会主义经济建设，并将集中所有力量”。°

北韩政府要求在内部使人民充分了解国家发展的战略路线转变的事实。°在受到经济制裁与施压的情况下，从内部不断强调经济自立，构建事业各领域自立的基础，特别是听从金正恩委员长的指示即“科学飞跃，教育保障未来”，强调科学教育事业是建设经济强国的重中之重。°为此，指示“在党组织内部，让所有工作人员、党员、劳动者深入理解党的新战略路线的精髓与正当性，以此为依托，展开组织政治事业，实现经济事业上的实质性成果”。°

新战略路线的成功需要对外关系的改善。°因此，在4月20日会议上宣布“为实现社会主义经济建设，将会营造有利的国家环境，为维护韩半岛与世界的和平，积极应对与周边国家以及国际社会的紧密关系与对话”。°2018年，北韩以参加平昌奥运会为起点，南北韩会谈、中朝领导人会谈、朝美领导人会谈皆是新战略路线即为了营造有利于国家经济发展的友好的国际环境的先前措施。°

应如何看待北韩的新战略路线？北韩的国家发展战略真的变化了吗？对此，有一种看法认为北韩是为了暂时缓解特朗普政府的强硬制裁与施压而采取的战术性措施，也有一种看法认为这是北韩经济发展战略发生了完全的转换。°

北韩于2011年已发表“国家经济开发10年战略计划”，随着张成泽的死亡，此“战略计划”有名无实，其内容涉及新建五个国家级、二十二个道级经济特别区。°实现这个计划，必须首先结束联合国、美国等国际社会的制裁与施压政策。°因此，北韩通过提出无核化的对话，希望解除制裁、施压，以获得经济飞跃的机会。°

同时，在内部，为了应对可能更为长期的制裁与施压，以动员内部资源、科学技术发展及教育为中心构建自立型经济的战略也未停止。°曾经计划五年内将现有的工厂及企业正常化的目标也付之东流。°2018年的新年贺辞让人很容易联想到2018年是五年战略的第三年的紧要关头下，并未达到预期目标，可以窥见其焦急之情。°

曾在欧洲留学的35岁年轻领导人，构筑20年以上统治计划蓝图的年轻领导人既焦虑又焦急。°与南韩的经济差距愈来愈大的情况下，北韩已刻不容缓。°2020年以内，不作好经济发展的前期准备便没有希望。°因此，北韩亮出了无核化的筹码。°这种选择将带来什么样的结果，还要拭目以待。°



## 第四轮：变化中的东亚地缘政治与半岛的角色

主持：陈波（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中国的崛起与旧金山体系的转变

申旭熙（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G2神话与东亚地区的治理

孙仁柱（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东亚爆发点的转移

李政勋（首尔大学中文系）

东北亚经济圈的崛起与东方和平

白池云（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 中国的崛起与旧金山体系的转变

申旭熙

(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冷战时期韩国的安保依靠美日韩三角同盟得以维系。然而，随着冷战的终结世界秩序也随之呈现出剧变的态势，关于这一转变走向的争论经历了从多极体系、单极体系、新双极体系，一直到如今各种形态的“无秩序”演变。也就是说，有关世界秩序形态转变的争论经历了“回归未来 (back to the future)”、911事件后的“单极时刻 (unipolar moment)”、中国崛起带来的“G2”和“亚洲世纪”，直到“美国重生”的可能性、中国的“新常态”以及多数“地区”的登场等一系列的演变，这一过程中世界秩序形态的特征变得愈加模糊，形态愈加复杂化。

然而，在半岛与东亚这一分析层面来考察韩国的安保问题时仍会受到中国崛起所带来的结构性因素变化的影响。借用德国社会学家卢曼 (Luhmann) 的表述，可以说以美日韩关系为中心的韩国现有安保体系在中国崛起这个“环境”因素的影响下正迎来一个重新划定“界线”的新时期。将其与国际政治理论中争论之一的“施动者-结构问题”相结合的话，可以将这一主题表述为韩国作为“施动者”该以何种方式与区域体系的结构变化互动。

在此前提下，首先需要探讨的是当下的安保体系——“旧金山体系”在中国崛起的环境下会受到何种影响，以及在此情况下韩国这一行为主体可以施展手脚的政策空间如何。为此，我们需思考有关中国崛起的各种解读及其所包含的地缘政治学、地缘经济学含义，分析旧金山体系的形成过程与体系中安保、经济与理念的连结方式与变化的层面，考察东亚安保中中国的崛起与美国的角色相冲突的地方，并在此基础上探讨韩国该用何种方式来转变当下的旧金山体系。

- 中国的崛起
- 旧金山体系
- 美国的角色 vs 中国的崛起

后冷战时期中国的不断崛起不可避免地给冷战时期形成的旧金山体系带来了转变的动因。

这以中日区域霸权博弈、中美间的权力转移、霸权转移以及秩序的变迁等形态表现出来，而美日韩三国应对这一变化的立场也必然各自有所不同。笔者认为，如果美国和日本更倾向于维持乃至强化现有体系的话，韩国的立场则是维持现状乃至谋求转变，而韩国应考虑的转变方向是在现有体系内谋求调整，这比瓦解或更换体系更为恰当。

如上所述，除了维持旧金山体系的现状之外韩国可以考虑的政策立场是谋求体系内部的转变调整，这需要多个层面上的努力。第一个层面是通过增强韩国的战略能力以谋求体系内的“内部平衡（internal balance）”。韩国在对朝鲜维持美韩联合防御态势的同时，需通过国防改革构建一定程度的军力，并持续与美国就核武及导弹进行磋商来达到加强韩国综合实力的目的。这种努力即可应对当前的威胁，也可应对潜在的威胁。

第二个层面是在维持美韩同盟的同时寻求扩大韩国的相对自主性。在这一层面上最重要的有关战时作战指挥权收回的讨论，李明博、朴槿惠政府对这一问题持保留态度，而文在寅政府的立场则是寻求早期的解决。为实现这一目标，在提升延伸威慑力的同时还需完善韩国的薄弱环节，而作战指挥权收回后美韩联合军司令部的重组问题可谓是核心的问题。

值得谨慎的是，韩国在旧金山体系内谋求扩大自主性的同时需参考2010年之后日本民主党政府的经验。鸠山首相在上任初就曾谋求“对等的美日关系”和推行排除美国的“东亚共同体”。对此，Armitage和Nye两位学者指出，为了构建对等的美日关系，日本需拿出将GDP的4%用作国防费，并自主研发核武器、推行自主外交的决心。他们还警告，如果美国一旦觉得自己在东亚受到排挤便会出手报复，如此一来日本将付出惨重代价。之后的野田内阁的对美立场重新转回到加强美日同盟，两国更于2012年11月就遏制中国的新方针的修订达成了一致。

第三个层面是与日本的合作。这一层面上的努力不仅在旧金山体系内谋求平衡时十分重要，在构建良好的体系外部环境——中日韩关系或是东北亚区域体系时也十分有必要。为此，韩日两国需克服起因于认知与国内政治因素的“双面安全困境”以改善政府间关系，与此同时还须实行“双轨制（two track）”来区分政治/安保与其他领域，并灵活运用多种渠道展开二轨外交（track two）。

最后一个层面与对朝关系的变化有关。如今，在对朝制裁的局面告一段落之后南北之间正展开多种形式的双方接触。这一变化给韩国政府提供了分开应对朝鲜“并进路线”的机会。也就是说，韩国可对朝鲜无核化问题持一贯立场的同时在经济与其他交流方面采取灵活的应对方式。当然，这有可能使得制裁与合作的界限变得模糊。为解决这一问题，当事国之间可通过调整双边政治关系来追寻长期的政策目标，对其结果的期待也变得可能。

## G2/新冷战的神话与东亚地区治理

孙仁柱

(首尔大学政治外交学部)

“世界上有两个最强大的国家，两者实力旗鼓相当” °笔者认为近来广为流传的这一叙事反倒成为了理解 `预测21世纪东亚秩序的一大障碍 °这种过分强调中美关系在全球重要性的观点很多时候都忽视了去中心化的 `多元的国际秩序的登场与中等国家的角色 °无论是侧重中美关系合作层面的“G2”，还是突出两国对立面的“新冷战”，这两个术语所包含的大国中心的逻辑与现实有着相当大的距离 °十多年前，美国开始称中国为“G2”以此吹捧中国，目的在于让中国承担“大国”应担负的国际责任 °中国看穿了美国的用意并拒绝了这一称谓 °中国虽然看似已跻身超级大国行列，但实际上高速增长带来的后遗症十分严重，正处于急于摆脱“中等国家陷阱”的状况 °2018年中美贸易战的爆发再次向世人展示了G2这一概念不过是脱离现实的“一厢情愿” °

同样，近来盛行的“新冷战”论调也存在用一刀切的方式看待事物的问题，忽视了复杂多样的国际秩序所包含的各种可能性 °20世纪的美苏关系与21世纪的中美关系相比而言，不同之处还是大过相似之处 °笔者认为至少要满足以下三个条件才足以判断类似美苏冷战的中美冷战时代已到来 °第一，存在让各大国吸附于两极中任一极的“权力的两极分布” °第二，应出现除了共同参加的少数国际机构之外，中美及其双方盟国彻底“分裂”的状况 °第三，中美两国在包括军事安保的全领域推行零和政策（zero-sum）争夺利益 °从2018年当下来看，以上几个条件与现实状况有着相当大的距离 °因此，“G2”也好“新冷战”也罢都只是个虚构的神话 °

中美的对立与全球领导力的缺位加快了去中心化 `多元化国际秩序形成的趋势 °如今美国与中国都对普世价值和国际法的作用持怀疑态度 °就像处于衰退期的罗马帝国否定自身辉煌时期所鼓吹的普世的价值和规范，转而强调本国的利益与特殊性一样，如今的美国也渐渐对普遍价值变得越来越消极 °9月特朗普总统的联合国演讲向世人昭示了“美国优先主义”（America is governed by Americans...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同样对普遍价值持怀疑态度的中国在贸易战激化之后

祭出了自力更生等口号让人不禁联想到毛泽东时代（2018年9月习近平主席：“美国逼中国走自力更生之路不是坏事”）°目前看来，中美两国会继续推动反全球化的趋势而不是扭转这一趋势°

不仅中美如此，反全球化主义在世界范围内已然有了愈演愈烈的趋势，再加上重视传统主权的政治势力的登场，这种种因素都可能弱化当前的全球与东亚区域治理的框架°同时在安保、贸易、金融与环境等多领域也可能出现多种治理模式共存的情况，它们在相互竞争的同时也会互相完善°从悲观的角度预测，未来将会出现一种以几个新重商主义国家为中心的分裂的国际秩序与治理模式°在这种情况下，霸权领导力的缺失将使得东亚的区域秩序变得充满矛盾且混乱不堪°乐观的分析是，多种双边或是小规模的多边主义合作体的共存使得选择性的合作变得可能，并不会发生严重的混乱°这种合作体并不是基于普世理念的全面且又单一的体制，它们富于弹性多元，能反映各地区、各国家的特性并相互竞争相互完善°为了实现这种去中心化、多元的合作模式，中等国家的战略与选择也将发挥重要的作用°

# 东亚爆发点的转移

李 政 勋  
(首尔大学中文系)

[ 別 添 ]





# 东北亚经济圈的崛起与东洋和平

白池云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 1. 半岛局势与中韩关系的逆行

2018年是半岛局势急剧动荡的一年的。朝韩举行了三轮首脑峰会，中朝也实现了首脑会谈，朝美两国首脑更是历史上首次共同坐在了会谈桌前。更何况第二轮朝美峰会，习近平主席访朝以及金正恩委员长访问首尔等划时代的大事件正在酝酿中，半岛风云可谓变幻莫测。南北关系曾有过几次大大小小的好转契机，例如1972年朝韩发表“7·4南北共同声明”，1994年开始推进南北首脑会谈，以及2000年的6·15宣言和2007年10·4南北共同宣言。当时这些契机未能从根本上改变半岛的局势纵有诸多原因，然而较之半岛现状，其中一个重大区别便是解决问题的主体不再仅限于朝韩和美国，中国、日本和俄罗斯也参与了进来。半岛问题俨然成了东北亚地缘政治与地缘经济中的关注焦点。

就像两德统一的过程中苏联的支持和美国的协助以及英法两国的同意为德国统一铺下了基石一般，半岛的统一若缺少周边国家的助力也是空谈。当然，当时的两德与如今半岛的情况相差甚远。当时负责统一谈判的西德总理赫尔穆特·科尔（Helmut Kohl）主导了2+4（两德+苏联、美国、英国和法国）的谈判模式，而时任西德外长汉斯-迪特里希·根舍（Hans-Dietrich Genscher）则将其解读为2+0.5（西德，苏联+美国）的模式。其意思是，在苏联拥有对东德绝对影响力的情况下，西德采取与苏联谈判的方式对其他变数具有相当的引导作用。与之相对比的是，历经冷战和后冷战时代后，中朝关系中出现的模糊性在某种程度上弱化了中国在半岛的作用。中国在面对解决半岛问题时流露出的暧昧模糊的态度使得各当事者对中国的真实用意起了疑心。年初，随着半岛局势急剧趋缓韩国舆论大肆鼓吹“中国边缘化论”便是一个典型的例子。即便中朝首脑实现会晤后这一论调有所低头，但韩国媒体、大众舆论以及专家之间普遍蔓延着一种消极、甚至否定中国在半岛事务中作用的观点。

这种消极看待甚至否定中国作用的观点之所以形成有几大直接的契机。首先，在过去十年的朝核僵局中，中国始终一贯坚持朝核问题是朝美之间的问题。面对遇冷的中朝关系，中国相关人士辩解道，中国能施力的余地很小。然而，作为区域内的大国以及半岛分裂的当事者，中国长期性对朝政策的缺失暴露无遗。次之，萨德部署后中国展开的对韩经济报复使得韩国社会内

有关中国的负面情绪鼎沸，这使得两国建交后逐步建立起来的友谊基础瞬间崩塌。根据首尔大统一和平研究院 2018 年度统一意识调查（以周边国家为对象意识调查，以下简称“调查”），2012~2016 年度韩国人的中国认知中合作-竞争-戒备的印象占比不相上下，而萨德风波过后戒备与敌对的印象则呈急剧上升之势。中国采取经济报复反制萨德的结果可谓是城门失火殃及池鱼，这不仅招致了对中国的不信任，还预示了两国间的“政冷经热”可随时转变为“政冷经凉”。

当然，半岛与周边国家之间的不信任不仅限于中国。根据上文的“调查”，韩国民众除了对朝态度有相当大的好转之外，对中国的敌对感大幅上涨，对日本和俄罗斯的不信任也是一如既往的根深蒂固。那么这里的问题是，在如今缺乏友好信任的东北亚周边环境下，半岛问题的解决是否可持续地推进？

## 2. 亚洲冷战的层叠性

中朝、中俄、中韩、韩日、中日以及朝日等东北亚各国之间错综复杂的敌对与不信任的结构具备了明显的亚洲冷战的特性，这一特性很难靠中俄朝“北方三角”对美日韩“南方三角”的传统冷战结构来充分说明。总的来说，既与世界冷战息息相关又独树一帜的亚洲冷战具有难以用传统阵营理论来说明的复杂内部构造。例如，在中苏对峙的两端美苏冷战和中美冷战在相互关联的同时也互相竞争，而在中苏这两个社会主义巨头之间越南、柬埔寨、蒙古和朝鲜也竞相逐鹿。斯大林死后美苏“和平共存”体系的形成导致了中苏冲突的发生，而讽刺的是，这助长了中国的危机意识并促成了中美建交。中国的“联美抗苏”战略孤立了苏联，结果苏联迎来了体制崩溃，而中国却通过改革开放成功实现软着陆。从这一层面来看，究其更深远的原因，如今朝鲜的孤立与危机不仅与全球范围的冷战有关，社会主义阵营内部的冷战也同样是推手。在中苏对峙的结构中，朝鲜并未像其他阵营内小国一样选择一边倒，而是运用等距离战略采取不站队的方式应对。然而，也正是朝鲜的这一战略选择使其失去了顺应全球后冷战时代潮流的机会。

另一方面，美日韩同盟体系阻碍了韩日两国间历史遗留问题的清算，滋生了两国间根深蒂固的矛盾。从这一观点来看，我们是否该将后冷战时期在东北亚得以存续再生的冷战看做是全球冷战格局与隐藏于各阵营内部之间的矛盾互相碰撞重叠而诞生的历史遗留问题？

## 3. 半岛新经济构想与东北亚地缘经济

○ 据媒体报道，4.27 南北首脑会晤中文在寅总统在徒步桥向金正恩委员长递交了一个装有“半岛新经济构想”的优盘。总统直属机关“北方经济合作委员会”提供的资料显示，半

岛新经济构想由新北方政策（东北亚超级电网）+新南方政策+北极航路的开设等构成，其涵盖的区域为西部圈（俄罗斯、白俄罗斯），中部圈（蒙古、中亚）以及东部圈（俄罗斯、中国东三省）。

- 衔接中国“一带一路”、俄罗斯“新东方政策”以及蒙古“草原之路”的基建投资与经济发展构想，拉入朝鲜，使其“走上一条不归桥”。
- 2018年10月4日，民主党宋永吉议员在民主党内成立东北亚和平合作特别委员会，南北经济合作正式启动。
- 2015年《战略蓝图》发表之后，中国国内有关“一带一路”中东北亚战略空白的议论一致没有停止。有人提出，为了恢复中国在东北亚因处理朝核问题失败而丧失的影响力，应积极推进“东北亚经济走廊”。
- “一带一路”中陆路之一的“中蒙俄走廊”，其终极目的是出海战略，连接乌兰巴托—天津，乔巴山—大连，乔巴山—锦州港后，最后与罗津港—扎鲁比诺港接通以完成东北亚经济圈。
- 新东北振兴战略：改革开放后，为了重建落后的东三省实施了通过新型工业化扶持制造业的战略。截至2003年，战略实施10年间东北平均经济增速达12.6%超过全国平均水平（10.5%），2011年“新常态”出现后开始放缓。2014年开始，中国整体增长率开始下降，从而招致经济陷入停滞的“新东北现象”（2016年东三省经济增速为全国最低水平）。
- 2018年8月，辽宁省提出“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和基于中日韩+X模式的“东北亚经济走廊”，为一带一路相关的首个省级试验区。

#### 4. 东北亚新经济版图构想与东洋和平的遗产

- 半岛新经济版图构想基于与一带一路相同的思考，即经济发展带来安全与和平。
- 上世纪东北地区的历史象征：俄日战争、伪满洲国、殖民地时代为供给军需而打造的重化工工业基地，新中国成立后仍是战略重化工基地。改革开放后产业结构明显老化，且因中朝关系的停滞而处于落后、封闭的状态。→ 是否可以打成一个开放、跨国的国际经济合作区域？
- 东北地区的历史遗产：1904年俄日战争爆发。1910年安重根义士在狱中手稿“东洋和平论”中提到：1）将俄日争夺的旅顺港打造成东洋和平的根据地，并由中日韩三国共同管理，2）选拔三国青年组成共同的军队，这些青年须学习其他两国语言，3）中日韩组织召开东洋和平会议，并使其发展成印度、泰国、缅甸等东洋诸国参与的国际会议，4）设

立并运营共同的金融机构，5)日本天皇作为东洋和平机构的代表，受天主教教皇的委任。  
→ 作为区域合作理念的意义与局限。(基于恐俄论的种族主义)

- 为了整合中蒙俄走廊-新东北振兴战略-半岛新经济版图构想使其成为一个可持续的东北亚合作模式，区域内相关国家需基于对共同历史文化遗产的深刻审视，努力创造一个共同的理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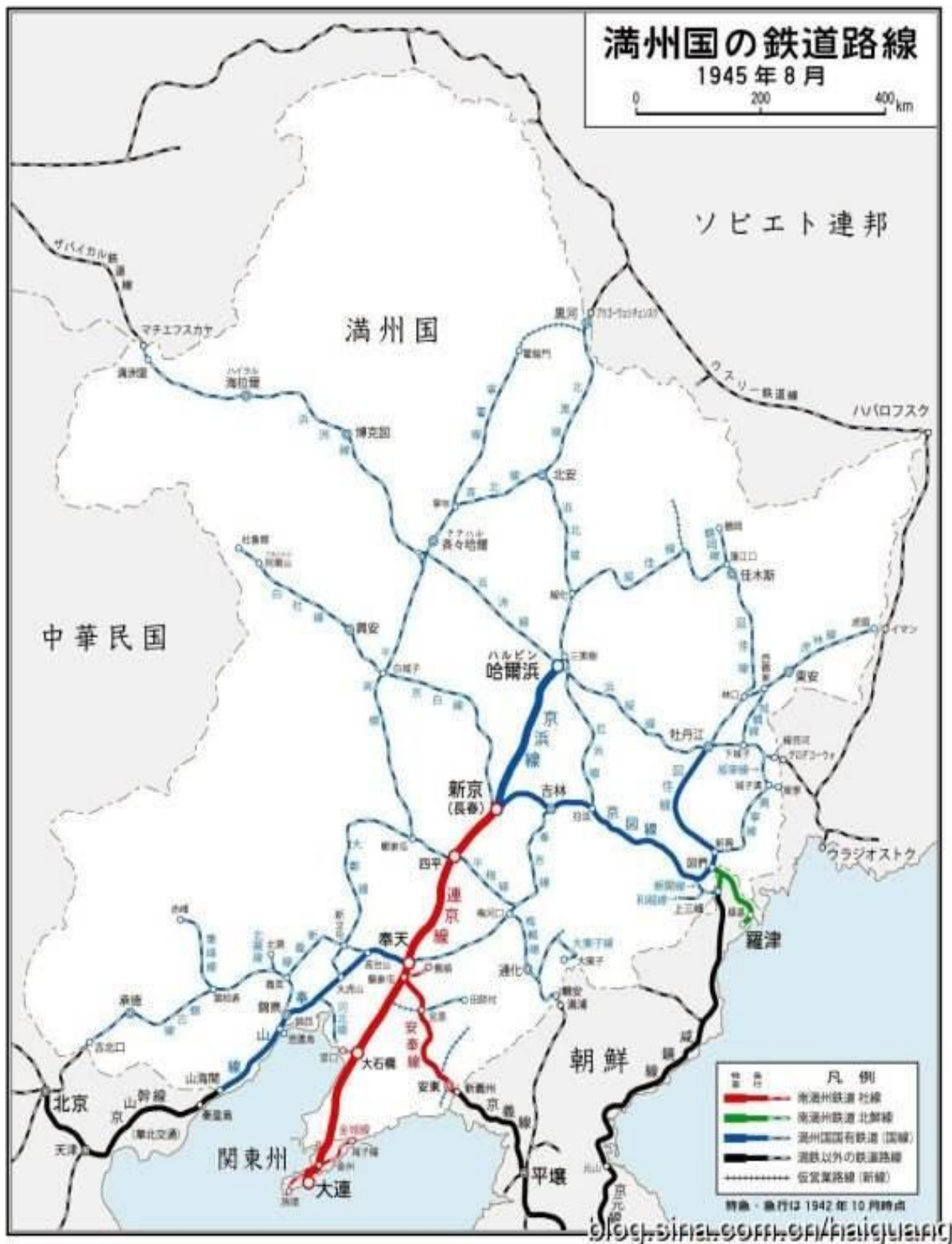




图 1 中蒙俄走廊与可连接的基建经济走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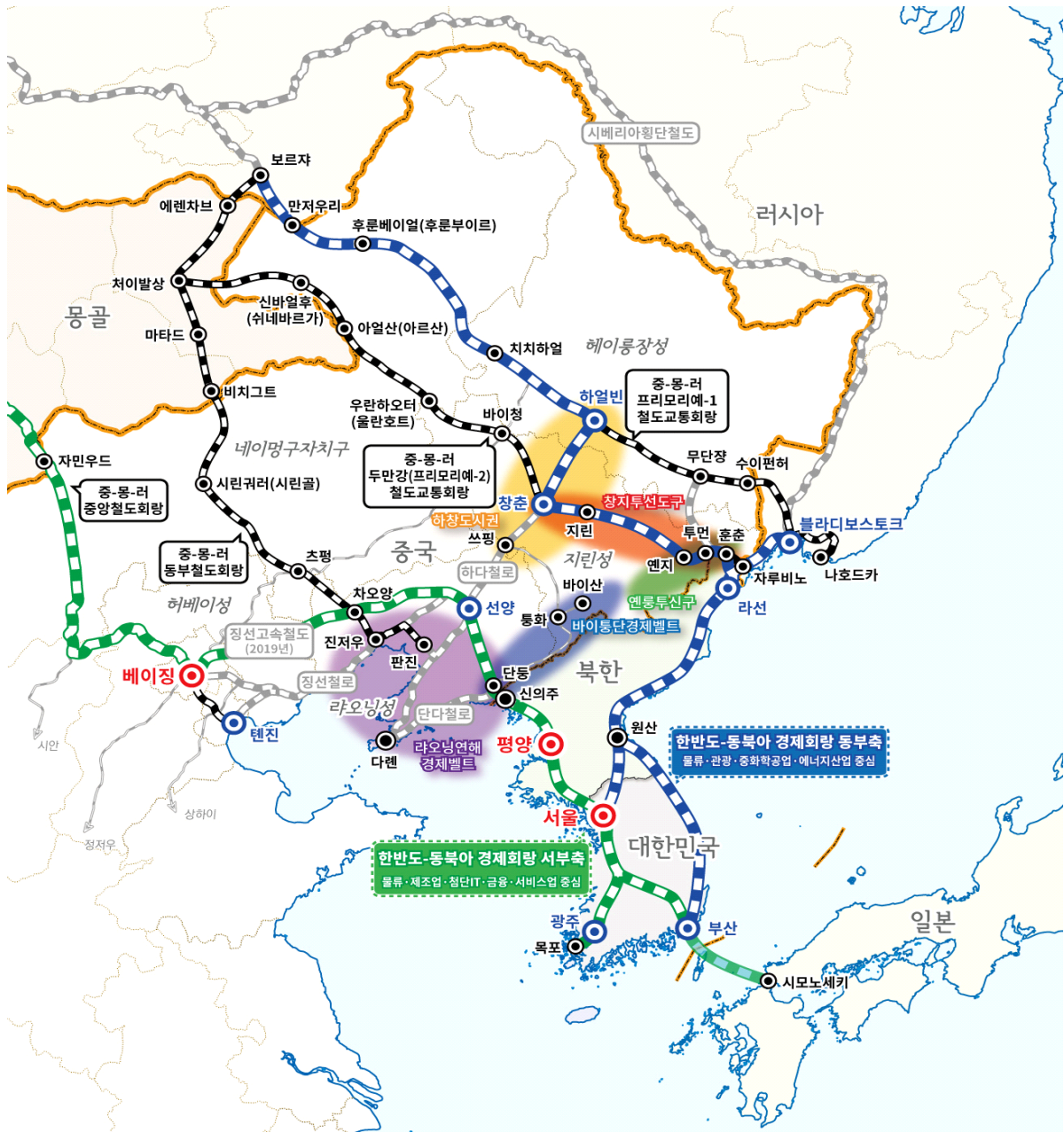


图 2 东三省地区发展计划与中朝韩基建经济关联图



图 3 中朝韩基建经济走廊中核心地区的主要产业



## 한중평화협력포럼 참석자 프로필

중국측 참가자				
	이름	소속	연구분야	최근 대표저서 및 논문
1	선즈화 / 沈志华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원장	냉전사, 소련사, 중소관계사, 중조(북중)관계사	『재중 소련 전문가』(2003) 『마오쩌둥, 스탈린 및 조선전쟁』(2003) 『최후의 천조: 마오쩌둥, 김일성 및 중조관계』(2009)
2	량즈 / 梁志	화동사범대학교 주변국가연구원 부원장	냉전사 (냉전시기 미얀마의 대외관계, 한반도 문제)	『냉전과 “민족국가의 형성” -한국 정치경제 발전 과정 속의 미국 요인(1945~1987)』(2011) 『냉전과 첩보: 미국 “프에블로호” 위기의 정책결정의 역사』(2014)
3	류밍 / 刘鸣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국제관계 이론, 미국의 동아시아국가 정책, 한반도 안보	『국제 체계: 역사의 변천 및 이론』(2006)
4	동지에 / 董洁	중공중앙당교 부교수	공산당사, 냉전사, 중조(북중)관계	『조선의 유엔 가입과 중조관계(1989~1991)』(논문, 2018) 『중소 결렬 후 중국의 대 조선 경제원조(1961~1965)』(논문, 2014)
5	천보 / 陈波	화동사범대학교 주변국가연구원 부교수	냉전사, 미국사	『냉전동맹과 그의 딜레마: 이승만 시기 한미동맹 연구』
6	리샤오지에/李效杰	산둥공상학원 인문학원 부교수	세계사, 수당(隋唐)사	『당나라 초기의 요동정벌과 동아시아 해상교통』(논문, 2018) 『실크로드와 “동국”의 지향 및 변천』(논문, 2018) 『당나라 시기 동아시아 해상교통 속의 덕물도(德物島) 해역』(논문, 2018)
7	자오청지에/赵成杰	운남대학교 역사 및 당안(檔案)학원 보조연구원/서울대 중어중문과 박사후	고대사, 고전문헌학	『금문상서주서이문연구 및 총집』(今文尚书周书异文研究及汇编, 2015) 『지역, 가학(家學) 및 사전(師傳): 청나라 중기 “설문학(說文學)”의 전개과 변영』(地域、家学及师承:清中叶 “说文学” 的展开与繁荣, 논문, 2017)

한국측 참가자				
	이름	소속	연구분야	최근 대표저서 및 논문
8	신욱희 / 申旭熙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Second Image Reconsidered: Quest for Unit Complexity in Northeast Asia (2006),”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2016)”
9	박태균 / 朴泰均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현대사, 한미관계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2007)』, 『베트남 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2015)』
10	손인주 / 孫仁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치외교, 동아시아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China’s Monetary Ambitions: RMB Internation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5),” “Regionalism as Financial Statecraft: Pursuit of Counterweight Strategies by China and Japan” (co-authored with Saori N. Katada) in Leslie E. Armijo and Saori N. Katada (eds.) 『Financial Statecraft of Emerging Powers: Asia and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4)』
11	이정훈 / 李政勳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문학(현대문학), 동아시아 지식담론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공저, 2008), 《當前知識狀況：2007 亞洲華人文化論壇》 (공저, 2007)
12	이상숙 / 李相淑	국립외교원 교수	국제정치, 북한외교, 북중관계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공저)
13	백지운 / 白池云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중국현대문학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2016, 공편), “중국은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 타이완·홍콩 문제를 보는 한 가지 시각(2016)” “일대일로와 제국의 지정학 (2018)”,
14	김성철 / 金聖哲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핵, 동맹관계, 중국 주변국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2017),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 (2017 편저) “Dynamics of Nuclear Power Policy in the Post-Fukushima Era: Interest Structure and Politicisation in Japan, Taiwan and Korea,” (2018 공저)
15	김병로 / 金炳魯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사회학(북한학)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공저),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공저)

## 中韩和平合作论坛 人物简介

中方				
	姓名	单位	研究领域	代表专著或论文
1	沈志华	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院长	冷战史、苏联史、中苏关系史、中朝关系	《苏联专家在中国（1948~1960）》（2003） 《毛泽东、斯大林与朝鲜战争》（2003） 《最后的“天朝”：毛泽东、金日成与中朝关系》（2009）
2	梁志	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副院长	冷战史、 冷战时期缅甸的对外关系、朝鲜半岛问题	《冷战与“民族国家建构”——韩国政治经济发展中的美国因素（1945~1987）》（2011） 《冷战与情报：美国“普韦布洛”号危机决策史》（2014）
3	刘鸣	上海社会科学院 国际问题研究所 研究员	国际关系理论、美国的东亚国家政策、朝鲜半岛安全问题	《国际体系：历史的演进与理论》（2006）
4	董洁	中央党校 副教授	党史、冷战史、中朝关系	“朝鲜加入联合国与中朝关系（1989-1991）”（论文，2018） “中苏分裂后中国对朝鲜的经济援助（1961-1965）”（论文，2014）
5	陈波	华东师范大学周边国家研究院 副教授	冷战史、美国史	《冷战同盟及其困境：李承晚时期美韩同盟关系研究》（2008）
6	李效杰	山东工商学院 人文学院 副教授	全球史、隋唐史	《唐初的辽东之役与东亚的海上交通》（论文，2018） 《丝绸之路与“东国”的指向和变迁》（论文，2018） 《唐代东亚海上交通中的德物岛海域》（论文，2018）
7	赵成杰	云南大学历史与档案学院助理研究员/ 首尔大学中文系博士后	中国古代史、古典文献学	《今文尚书周书异文研究及汇编》（2015） 《地域、家学及师承：清中叶“说文学”的展开与繁荣》（论文，2017）

韩方				
	姓名	单位	研究领域	代表专著或论文
1	申旭熙	首尔大学政治外交系 教授	国际政治理论、外交政策、东亚国际关系	“Second Image Reconsidered: Quest for Unit Complexity in Northeast Asia (2006),” 《从“日本问题”到“朝鲜问题”：朝鲜战争带来的东北亚危险转移》(2016)”
2	朴泰均	首尔大学国际大学院 教授	韩国现代史、韩美关系	《原型与变相：韩国经济开发计划的起源》(2007), 《越南战争：被遗忘的战争，半边的记忆》(2015)
3	孙仁柱	首尔大学政治外交系 教授	中国政治外交、东亚比较政治、国际政治经济	“China’s Monetary Ambitions: RMB Internation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5),” “Regionalism as Financial Statecraft: Pursuit of Counterweight Strategies by China and Japan” (co-authored with Saori N. Katada) in Leslie E. Armijo and Saori N. Katada (eds.) 『Financial Statecraft of Emerging Powers: Asia and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4)』
4	李政勋	首尔大学中文系 教授	中国文学（现代文学），东亚知识谈论	《文艺公共领域的形成与东亚》（合著，2008），《当前知识状况：2007 亚洲华人文化论坛》（合著，2007）
5	李相淑	国立外交院 教授	国际政治、朝鲜外交、朝中关系	《岔口上的朝鲜，金日成的选择》（合著，2011）
6	白池云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HK 教授	中国现代文学	《中国日常里的朝鲜印象》（2016，合编）， “中国将成为怎样的国家：看待台湾/香港问题的一种视角”（论文，2016）， “一带一路与帝国的地缘政治学”（论文，2018）
7	金圣哲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HK 教授	核问题、东盟关系、中国周边国家关系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2017),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2017, 编著) “Dynamics of Nuclear Power Policy in the Post-Fukushima Era: Interest Structure and Politicisation in Japan, Taiwan and Korea,” (2018, 合著)
8	金炳鲁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 HK 教授	社会学（朝鲜学）	《中朝间社会-经济网络的形成与结构》（合著，2008） 《将北韩重新读作朝鲜》（2016） 《重新憧憬统一：韩半岛未来战略与“和平联合”构想》（2017） 《后社会主义体制转变与北韩的未来》（合著，2018），